

전발연 2006 정책연구

전라북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대안

2006.12.



전북발전연구원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진

연구책임: 한승주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4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1. 연구의 내용	4
2. 연구의 방법	7
제 2 장. 전라북도 출산관련 현황	9
제 1 절 일반적 인구현황	11
1. 전라북도 가구수 및 인구수	11
2. 전라북도 연령별 인구구성	12
3. 시군별 인구이동	14
4. 시군별 인구구성의 변화	15
제 2 절 혼인 및 이혼관련 현황	16
1. 조혼인율	16
2. 초혼연령의 변화	17
3. 미혼율의 변화	18
4. 이혼율 및 재혼율	19
제 3 절 출산관련 현황	21
1. 출산율의 변화	21
2. 출생아수 변화.....	22
3. 가임여성수 변화.....	23
4. 출산순위별 출생.....	24
5. 출생성비의 변화.....	24

제 3 장.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정책	27
제 1 절 중앙정부의 출산정책	29
1. 출산정책 추진경위	29
2. 중앙정부의 출산정책 방향	31
3. 중앙정부의 출산정책	32
제 2 절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정책 및 평가	34
1.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정책	34
2. 전라북도의 출산정책	36
3. 전라북도의 출산정책 평가	42
제 4 장. 출산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 조사	45
제 1 절 저출산 원인의 영향력 평가	47
1. 저출산 원인의 영향력 평가	47
2. 저출산 원인의 영향력 순위	48
제 2 절 정부의 분야별 정책의 중요성	50
제 3 절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정책 평가	52
1. 임신관련 정책 평가	52
2. 출산관련 정책 평가	54
3. 양육관련 정책 평가	55
4. 지방자치단체 출산정책의 효과성 우선순위	57
제 4 절 전문가 정책 제안	59
1. 자치단체에서 시행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	59
2. 출산장려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의견	63
3. 양성평등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의견	64
4. 여성계와 여성단체의 역할	65
5. 전라북도의 지원방안	66
제 5 장. 출산정책 개발을 위한 일반인 조사	67
제 1 절 조사응답자의 특성	69
제 2 절 결혼 및 이혼에 관한 가치관	71
1. 결혼에 관한 가치관	71
2. 이혼에 관한 가치관	73
3. 결혼 연령에 관한 가치관	74

제 3 절 출산에 대한 가치와 태도.....	76
1. 일반적인 자녀의 수	76
2. 혼전 임신에 대한 의견	77
3. 자녀 출산계획의 최종권한	78
4. 현재 자녀의 수	79
5. 출산계획의 수립 및 이행.....	79
6. 자녀양육 - 남편도움 정도	81
7. 추가자녀 출산계획 및 부모도움 여부	81
8. 육아휴직 이용	83
9. 남성의 육아휴직에 관한 의견	84
10. 출생아수 감소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84
제 4 절 저출산 원인의 영향력 평가	85
1. 저출산 원인의 영향력 평가	85
2. 저출산 원인의 영향력 순위	86
제 5 절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정책 평가	87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정책의 실효성 평가	87
2. 임신관련 정책 평가	88
3. 출산관련 정책 평가	89
4. 양육관련 정책 평가	90
5.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효과성 우선순위	92
6. 출산이 가능한 바람직한 사회여건	92
제 6 장. 전라북도 출산정책 추진방안	95
제 1 절 단기정책 추진방안	97
1. 저출산 대비 추진체계의 구축	97
2.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100
3. 실질적 교육 및 혜택 제공	101
제 2 절 중장기정책 추진방안	103
1. 인구유입 및 인구유출 방지정책	103
2. 출산관련 홍보정책	104
3.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실시.....	105
■ 참고 문헌 ■	107

표 목 차

<표1-1> 전문가 조사 내용	5
<표1-2> 일반인 설문조사 내용	6
<표2-1> 전라북도 가구수 및 인구수	11
<표2-2> 연령별 인구구성	12
<표2-3> 연령별 인구구성비의 변화	13
<표2-4> 시군별 인구이동	14
<표2-5> 시군별 인구구성의 변화	15
<표2-6> 시군별 연령별 인구구성비	16
<표2-7> 조혼인율	16
<표2-8> 초혼연령의 변화	17
<표2-9> 15세 이상 미혼율의 변화	18
<표2-10> 시군별 15세 이상 미혼율	19
<표2-11> 이혼율 및 재혼율의 변화	20
<표2-12> 연도별 합계출산율 현황	21
<표2-13> 연도별 전북의 총인구 및 출생아수	22
<표2-14> 가임여성수의 변화	23
<표2-15> 출산순위별 출생	24
<표2-16> 출생성비의 변화	25
<표3-1> 중앙정부의 출산정책 개요.....	32
<표3-2>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정책	34
<표3-3> 전라북도 및 시·군의 출산정책	36
<표3-4> 전라북도 및 시·군의 출산정책 - 임신관련 정책	37
<표3-5> 전라북도 및 시·군의 출산정책 - 출산관련 정책	39
<표3-6> 전라북도 및 시·군의 출산정책 - 양육관련 정책	41
<표3-7> 전라북도 시·군의 임신관련 정책	42
<표3-8> 전라북도 시·군의 출산관련 정책	43
<표3-9> 전라북도 시·군의 양육관련 정책	44
<표4-1> 저출산 원인의 영향력 평가	47
<표4-2> 저출산 원인의 영향력 순위	48

<표4-3> 정부의 분야별 정책의 중요성 - 우선순위	50
<표4-4> 임신관련 정책 평가	52
<표4-5> 출산관련 정책 평가	54
<표4-6> 양육관련 정책 평가	56
<표4-7>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효과성 - 우선순위	58
<표4-8> 정부의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분야 추진정책	60
<표4-9> 정부의 가족친화적·양성평등적 사회문화 조성 분야 추진정책	61
<표4-10> 정부의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분야 추진정책	62
<표4-11> 전문가 제안 중 자치단체에서 채택 가능한 의견	64
<표4-12> 여성계와 여성단체의 역할에 대한 의견	65
<표5-1> 조사응답자의 특성	70
<표5-2> 결혼에 관한 가치관	71
<표5-3> 사회통계조사 결과-결혼에 관한 가치관	72
<표5-4> 이혼에 관한 가치관	73
<표5-5> 이상적인 결혼 연령에 대한 의견	75
<표5-6> 자녀의 수에 대한 의견	77
<표5-7> 혼전 임신에 대한 의견	78
<표5-8> 자녀 출산계획의 최종권한	78
<표5-9> 현재 자녀의 수	79
<표5-10> 출산계획의 수립 및 이행	80
<표5-11> 출산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이유	80
<표5-12> 자녀양육-남편도움 정도	81
<표5-13> 추가자녀 출산계획 및 부모도움 여부	82
<표5-14> 현재 자녀의 수에 따른 추가자녀 출산계획	82
<표5-15> 추가자녀 출산 시 양육 주체	83
<표5-16> 남성의 육아휴직에 관한 의견	84
<표5-17> 저출산 원인의 영향력 평가	85
<표5-18> 저출산 원인의 영향력 순위	86
<표5-19>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관련 정책의 실효성	87
<표5-20> 임신관련 정책 평가	88
<표5-21> 출산관련 정책 평가	90
<표5-22> 양육관련 정책 평가	91
<표5-23>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효과성 - 우선순위	92
<표5-24> 출산이 가능한 바람직한 사회여건	93

그림 목 차

<그림1-1> 연구수행 흐름도	8
<그림2-1> 연령별 인구구성	12
<그림2-2> 연령별 인구구성비의 변화	13
<그림2-3> 시군별 인구구성의 변화	15
<그림2-4> 조혼인율의 변화	17
<그림2-5> 초혼연령의 변화(여성)	18
<그림2-6> 이혼율 및 재혼율	20
<그림2-7> 연도별 합계출산율 현황	21
<그림2-8> 연도별 전북의 총인구 변화	22
<그림2-9> 연도별 전북의 출생아수 변화	23
<그림2-10> 전북의 가임여성수 변화	23
<그림2-11> 출생성비의 변화	25
<그림3-1> 중앙정부의 출산정책 방향	31
<그림4-1> 저출산 원인의 영향력 평가	48
<그림4-2> 저출산 원인의 영향력 순위	49
<그림4-3> 정부의 분야별 정책의 중요성 - 우선순위	51
<그림4-4> 임신관련 정책 평가	53
<그림4-5> 임신관련 정책의 효과성 평균	53
<그림4-6> 출산관련 정책 평가	54
<그림4-7> 출산관련 정책의 효과성 평균	55
<그림4-8> 양육관련 정책 평가	56
<그림4-9> 양육관련 정책 효과성 - 평균	57
<그림4-10>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효과성 - 우선순위	58
<그림4-11>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분야 주요 제안 내용	60
<그림4-12> 가족친화적·양성평등적 사회문화 조성 분야 전문가 제안 내용	61
<그림4-1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분야 전문가 제안 내용	62
<그림4-14> 기타 정책 제안 내용	62
<그림4-15> 출산장려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의견	63

<그림4-16> 양성평등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의견	64
<그림4-17> 전라북도의 지원방안	66
<그림5-1> 결혼에 관한 가치관- 성별 차이	72
<그림5-2> 이혼에 관한 가치관 - 소득수준별 차이	74
<그림5-3> 자녀의 수에 대한 의견	77
<그림5-4> 출산계획의 수립 및 이행	80
<그림5-5> 추가자녀 출산계획 및 부모도움 여부	82
<그림5-6> 출생아 수 감소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84
<그림5-7> 저출산 원인의 영향력 평가	86
<그림5-8> 임신관련 정책의 효과성 평균- 비교	89
<그림5-9> 출산관련 정책의 효과성 평균	90
<그림5-10> 양육관련 정책 평가-평균	91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인구증가억제정책의 영향으로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이 1960년의 6.0명에서 1980년에 2.83명으로 급격히 저하되었음. 1983년에는 인구대체수준(replacement level)인 2.1에 이르렀음. 그러나 이는 더욱 가속화 되어 1995년 합계출산율 1.65명에 도달하였고, 2005년에는 1.08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음(통계청, 2005)
- 이러한 추세는 독신의 증가, 결혼 연령 상승, 그리고 기혼여성의 출산지연 등으로 인하여 출산율이 더욱 저하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가, 자녀양육의 어려움, 그리고 가정과 직장생활의 병행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고 기존의 저출산 문제 연구에서 밝히고 있음
- 전북의 출생자는 1990년 23,753명에서 1995년에는 27,085명으로 증가했다가 2005년에는 15,617명으로 1990년 대비 34.3%가 감소하였음. 전북의 합계출산율도 1.17명으로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이 1.08명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나 전국 8위를 기록하고 있음
- 전북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인한 청장년층의 외부로의 인구유출이 심각하여 출산 가능인구의 감소현상이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출산에 관련된 지역민의 가치관과 태도를 살펴보고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특히 기 실시된 출산장려정책이 획일적인 중앙정부 중심의 시책추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특수한 욕구에 대응하여 전라북도에서 시행할 수 있는 시책발굴을 목적으로 함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의 지속으로 전북의 인구규모 및 구조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특수한 욕구에 대응하여 전라북도에서 시행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음
- 1) 통계자료를 통해 전라북도의 출산관련 현황을 살펴봄
 -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 관련 정책을 검토 평가
 - 3) 출산과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출산정책평가와 출산정책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분석
 - 4) 전북지역 일반인의 출산관련 의식과 정책적 욕구를 분석
 - 5) 이상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라북도에서 시행 가능한 저출산 관련 정책을 도출해 보고자 함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 본 연구는 전라북도의 출산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조사와 일반인 조사의 두 가지 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함
- 전문가 조사를 통해서는 전라북도에서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책을 발굴하고자 하였고,
- 일반인 조사를 통해서는 전북도민의 결혼 및 출산관련 의식과 출산관련 정책 욕구를 알아보하고자 하였음
- 구체적인 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전문가 조사

- 전문가 조사는 학계, 의료계, 언론계, 보육계, 여성계, 기업 및 노동계, 여성의원 및 정당인, 종교계, 교육계 - 총 9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를 선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전문가 조사는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현재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불리고 있는 항목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와 영향력 정도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정책에 대한 평가와 효과성을 알아보았음. 그리고 출산장려정책의 추진방향과 사회 각 부문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살펴봄

<표1-1> 전문가 조사 내용

구 분	내 용
저출산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 원인에 대한 평가 · 저출산 원인의 영향력 정도 · 기타 저출산 원인에 대한 의견
출산정책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평가 · 전라북도(시·군)의 출산관련 시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 출산관련 정책의 효과성 및 우선순위 ·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
출산장려정책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장려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의견 · 양성평등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의견
부문별 역할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계와 여성단체의 역할 · 전라북도의 지원방안

2) 일반인 조사

- 일반인 조사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가임기 일반인을 대상으로 아래 <표1-2>와 같은 내용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음
- 주요 내용으로는 결혼 및 이혼, 출산에 관한 가치관 및 태도를 살펴보고,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인식과 출산정책에 대한 평가와 사회적 여건에 대한 인식을 살펴봄

<표1-2> 일반인 설문조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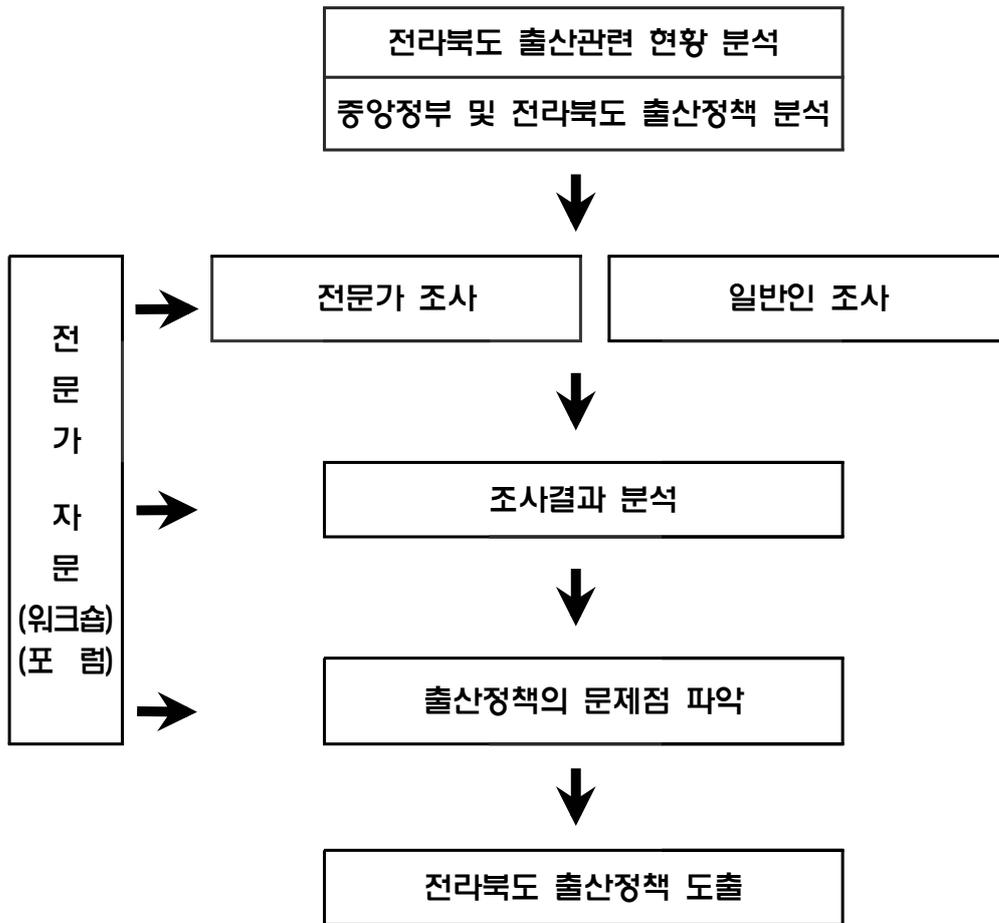
구 분	내 용
결혼 및 이혼에 관한 가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에 관한 가치관 · 이혼에 관한 가치관 · 결혼연령에 관한 가치관 (남, 녀)
출산에 대한 가치와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응답자 대상) · 일반적인 자녀의 수 · 본인이 가지고자 하는 자녀의 수 · 혼전 임신에 관한 의견 · 자녀출산계획 최종 결정권한 (기혼자 대상) · 현재 자녀의 수 · 출산계획유무 및 이행상황 · 자녀양육 - 남편도움 정도 · 추가자녀계획 (직장이 있는 기혼여성 대상) · 육아휴직 이용 계획 · 육아휴직 이용하지 않는 이유
저출산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평가 · 저출산 원인의 영향력 정도
출산관련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아수 감소에 대한 심각성 평가 ·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출산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 남성 육아휴직 관련 의견 · 전라북도(시·군)의 출산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 출산관련 정책의 효과성 및 우선순위 · 출산을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여건
개인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 연령 · 혼인상태 · 학력 · 직업 · 평균수입

2. 연구의 방법

-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전문가 조사, 일반인 조사, 전문가 워크숍 및 포럼의 방법을 병행함
- 문헌연구
 - 기존의 문헌에 나타난 저출산의 원인 및 출산관련 현황에 대한 문헌을 검토하여 전라북도의 저출산 원인과 출산관련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정책에 대한 실태 분석을 통해 전라북도 정책의 현실을 파악,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설문지 구성을 구체화하였음
- 전문가¹⁾ 조사
 - 출산관련 분야(학계, 의료계, 언론계, 보육계, 여성계, 기업 및 노동계, 여성의원 및 정당인, 종교계, 교육계 - 총 9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를 선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실질적인 정책 도출하고자 함
- 일반인 조사
 -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가임기²⁾ 일반인을 대상으로 결혼 및 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가치관과 출산관련 정책의 요구사항을 알아보고 성별, 연령별 차이를 분석하여 출산정책 개발에 활용하고자 함
- 전문가 워크숍 및 포럼
 -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여러 가지 정책들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자문을 듣고, 수정하는 작업을 거치기 위해 워크숍 및 포럼을 개최함
- 본 연구의 수행 흐름도를 도식화 하면 다음의 <그림1-1>과 같음

1) 본 연구에서 '전문가'란 각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직업 및 단체영역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자를 말함

2) 가임기란 임신이 가능한 시기로서 통계청에서 합계출산율을 도출할 때에는 15세~49세를 가임연령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의 가임기는 실질적으로 혼인을 하여 건강한 출산이 가능한 시기인 20세~44세로 정의함



<그림1-1> 연구수행 흐름도

제 2 장

전라북도 출산관련 현황

- 제 1 절 일반적 인구현황
- 제 2 절 혼인 및 이혼관련 현황
- 제 3 절 출산관련 현황

제 2 장 전라북도 출산관련 현황

- 본 장에서는 전라북도의 출산관련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출산관련 지표현황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여기서 나타나는 이슈들을 도출해 보고자 함. 전라북도의 일반적인 인구현황과 출산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혼인 및 이혼관련 현황, 그리고 출산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살펴보고자 함

제 1 절 일반적 인구현황

1. 전라북도 가구수 및 인구수

1) 전라북도 가구수 및 인구수

- 2005년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전라북도의 가구수 및 인구수를 보면, 2005년도 기준 가구수는 621,735가구이며 인구수는 1,885,335명임
- 전북지역 가구당 인구수는 3.03명으로 전국 가구당 인구수 3.05명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며, 전국 및 전북은 모두 평균적으로 가구당 3인정도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음

<표2-1> 전라북도 가구수 및 인구수

(단위 : 명)

구 분	가구수	인구수	가구당 인구수
전 국	15,988,274	48,782,274	3.05
전 북	621,735	1,885,335	3.03

자 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5.

2. 전라북도 연령별 인구구성

1) 연령별 인구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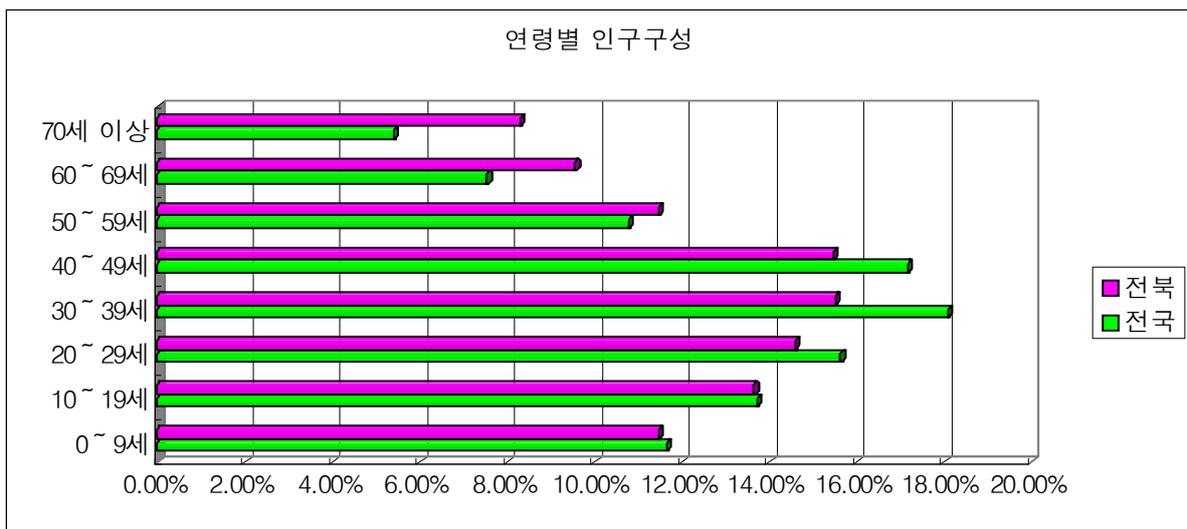
- 전라북도의 2005년도 연령별 인구구성을 보면 <표2-2>와 <그림2-1> 과 같음
- 40대 이하 연령의 인구비율은 전국이 더 높고, 50대 이상의 인구비율은 전북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음. 특히 70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북(8.29%)이 전국(5.93%)보다 높아 전북인구가 고령화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음
- 시군의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시군으로는 임실군이 26.0%로 가장 높고 20%이상 초고령화된 지역은 8개 시군으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고령화가 심각함³⁾

<표2-2> 연령별 인구구성

(단위 : 명, %)

구 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연령별 인구구성 (비율)	전 국	5,691,753 (11.67)	6,696,960 (13.73)	7,626,560 (15.63)	8,821,761 (18.08)	8,373,208 (17.16)	5,262,039 (10.79)	3,679,887 (7.54)	2,630,106 (5.39)
	전 북	216,056 (11.46)	257,407 (13.65)	275,223 (14.60)	292,602 (15.52)	291,194 (15.45)	216,312 (11.47)	180,169 (9.56)	156,372 (8.29)

자 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2005.



<그림2-1> 연령별 인구구성

3) 2006년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65세 이상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지역은 임실군(26.0%), 진안군(25.2%), 순창군(24.8%), 장수군(24.5%), 무주군(24.3%), 고창군(23.5%), 부안군(21.6%), 김제시(20.3%)의 순서임. 이에 대한 통계는 통계조사에 따라 자치단체의 기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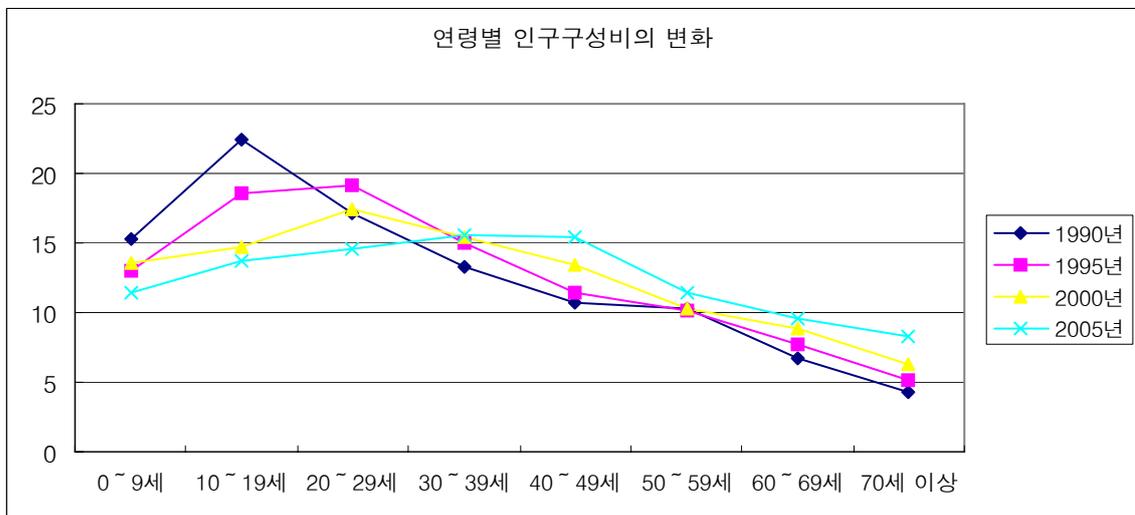
- <표2-3>과 <그림2-2>는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전라북도의 연령별 인구구성비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전반적으로 30대 이하의 생산연령층인 청년층이 감소하였고, 40대 이상 중장년층 및 노령층의 비율은 늘어나고 있음
- 특히 70세 이상의 비율은 1990년 4.32%에서 2005년은 8.29%로 2배가량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
- 이 같은 현상은 전국적으로 노령층이 증가하는 것과 유사한 현상이지만 특히, 전북의 경우는 노령화가 더 심각하여 노령층이 전국에 비해 높은 편임

<표2-3> 연령별 인구구성비의 변화

(단위 : %)

구 분	연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전 북	1990	15.25	22.41	17.10	13.26	10.72	10.27	6.67	4.32
	1995	12.95	18.61	19.08	14.94	11.38	10.13	7.73	5.17
	2000	13.55	14.77	17.47	15.48	13.38	10.29	8.82	6.24
	2005	11.46	13.65	14.60	15.52	15.45	11.47	9.56	8.29

자 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2005.



<그림2-2> 연령별 인구구성비의 변화

3. 시군별 인구이동

- 2005년 전북의 각 시군의 인구이동을 보면 14개 시군 중 전입이 전출보다 많은 지역은 임실, 순창, 진안 3개군이며, 나머지 11개 시군은 전출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현상인 전북지역의 인구유출 현상으로 인해 저출산 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인구의 유출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연령별로 세분화 하여 살펴보면 생산연령층인 중장년층의 인구유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표2-4> 시군별 인구이동

(단위 : %)

구 분	인구수	전입	전출	전입-전출
계	1,885,335	33,962	36,198	- 2,236
전주시	621,749	14,189	15,475	- 1,286
군산시	323,120	3,572	4,271	- 699
익산시	318,506	4,795	5,525	- 730
남원시	93,670	1,129	1,569	- 440
정읍시	129,050	1,630	2,117	- 487
김제시	102,720	1,329	1,634	- 305
완주군	83,651	1,301	1,522	- 221
고창군	63,676	665	884	- 219
부안군	65,018	669	972	- 303
임실군	32,511	610	499	111
순창군	32,012	1,431	505	926
무주군	25,876	265	344	- 79
진안군	29,021	2,135	611	1,524
장수군	24,755	242	270	- 28

자 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인구이동』 2005.

4. 시군별 인구구성의 변화

- 전북의 시군별 인구구성의 변화를 보면 81.9%가 시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18.9%는 군지역에 거주하여 시·군의 인구구성 격차가 매우 큼
- 또한 1995년 시지역의 인구비율이 77.86%였던 것에 비해 2005년에는 81.09%로 증가하여 시지역으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2-5>시군별 인구구성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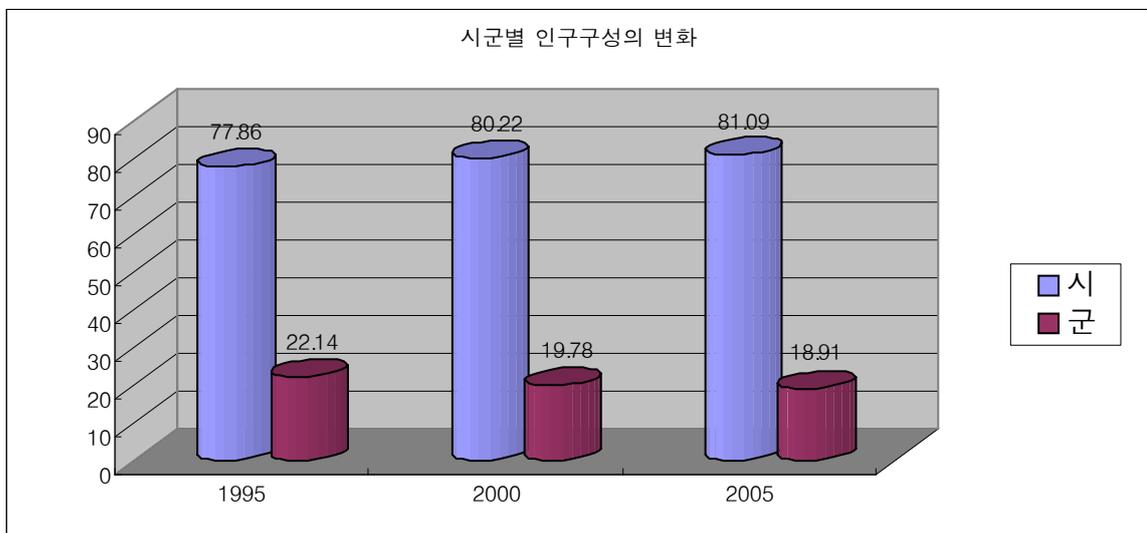
(단위 : 명, %)

전 북	구 분	1995	2000	2005
	계		2,006,602	1,999,255
시		1,562,414 (77.86)	1,603,794 (80.22)	1,528,815 (81.09)
군		444,188 (22.14)	395,461 (19.78)	356,520 (18.91)

자 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5.

전라북도, 『전북통계연보』, 『주민등록인구통계』 2005.

* 주: 외국인 비포함



<그림2-3> 시군별 인구구성의 변화

- 시·군의 연령별 인구구성비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2-6>과 같은데, 60세 이하 연령층의 비율이 84.57%이며 60세 이상의 노령층은 15.43%임. 반면 군지역의 경우는 60세 이하 연령층의 비율이 71.73%이며 60세 이상의 노령층은 28.27%로 군지역에 노령층의 비율이 매우 높음

<표2-6> 시군별 연령별 인구구성비

(단위 : %)

지역	합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전체	100.0	11.46	13.65	14.60	15.52	15.45	11.47	9.56	8.29
시	100.0	12.02	14.37	14.89	16.26	15.89	11.14	8.37	7.05
군	100.0	9.07	10.56	13.33	12.36	13.52	12.89	14.65	13.63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2005.

제 2 절 혼인 및 이혼관련 현황

1. 조혼인율

-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조혼인율의 변화(<표2-7>,<그림2-4> 참조)를 보면, 전반적으로 전북 및 전국의 혼인율은 낮아지고 있음
- 전북의 경우 1998년 6.6건이었으나 2005년 5.4건으로 7년 만에 1.2건 줄어들었으며, 전국의 혼인율 보다 낮은 수치를 보임
- IMF 이후 혼인율이 급격하게 낮아졌으며, 2000년 이후 등락을 보이며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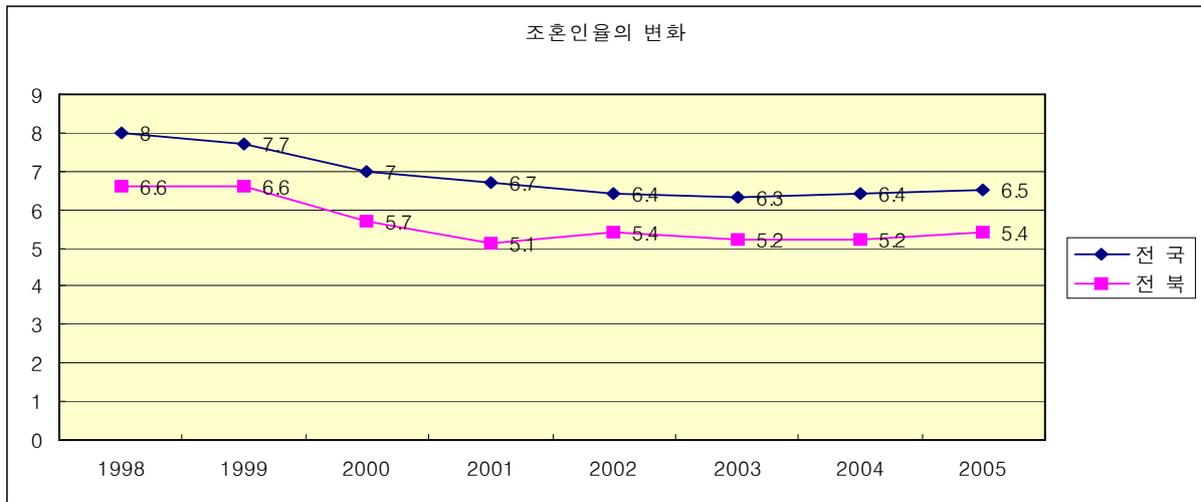
<표2-7> 조혼인율 *

(단위 : 천명당 건)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국	8.0	7.7	7.0	6.7	6.4	6.3	6.4	6.5
전북	6.6	6.6	5.7	5.1	5.4	5.2	5.2	5.4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동태조사』, 『인구통계연보』 각 년도.

* 조혼인율=(1년간의 총혼인수/당해연도의 연앙인구)×1000



<그림2-4> 조혼인율의 변화

2. 초혼연령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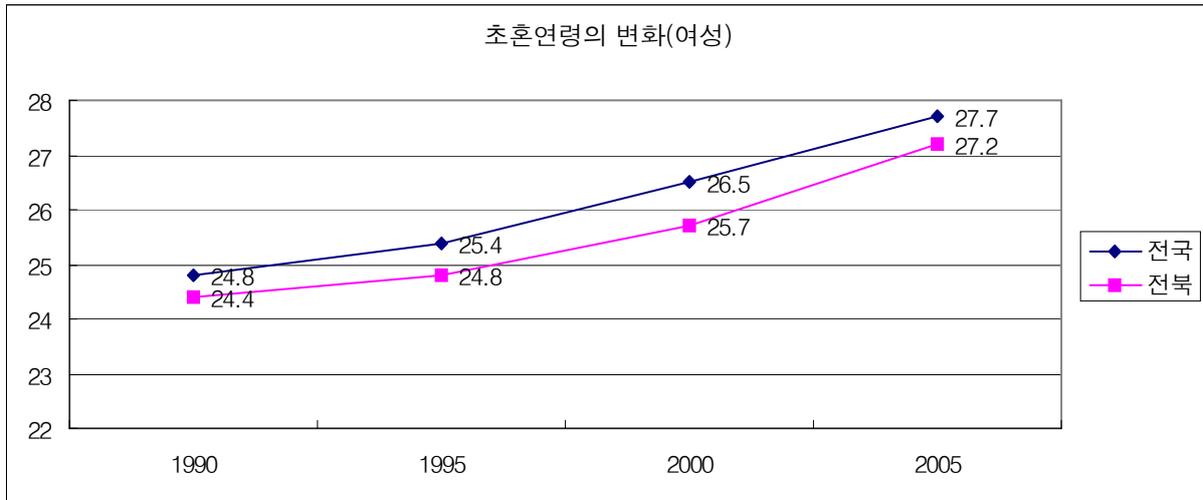
- 초혼연령의 변화 역시 출산력 저하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음(<표2-8 참조>). 전라북도는 1990년 여성 24.4세, 남성 27.5세로 남녀간의 격차는 3.1세였음. 2005년에는 여성 27.2세, 남성 30.8세로 초혼연령이 상승하였으며, 남녀간의 격차는 3.6세 임
- 전국의 평균 초혼연령의 격차는 2.2세인데 비해 전북의 경우 3.6세로 남녀간의 격차가 큼
- 초혼연령의 상승은 출산력 저하와 많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초혼연령이 늦어짐에 따라 첫째아 출산이 늦어지고, 고령임신이 되어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임
- 이러한 초혼연령이 높아지는 이유는 취업이 어려워짐으로 결혼연령층의 경제적 기반이 불안하여 혼인을 늦추기 때문임

<표2-8> 초혼연령의 변화

(단위 : 세)

연도	평균 초혼연령(전국)			평균 초혼연령(전북)		
	여성	남성	남녀차	여성	남성	남녀차
1990	24.8	27.8	3	24.4	27.5	3.1
1995	25.4	28.4	3	24.8	28.2	3.4
2000	26.5	29.3	2.8	25.7	28.8	3.1
2005	27.7	30.9	2.2	27.2	30.8	3.6

자 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편)』 각 년도.



<그림2-5> 초혼연령의 변화(여성)

3. 미혼율의 변화

- 15세 이상 남녀의 미혼율의 변화(<표2-9>참조)를 보면, 전국과 전북 모두 남성의 경우 미혼율이 30% 초반임에 비하여 여성의 경우는 20% 초반으로 남성의 미혼율이 더 높음
- 전북의 경우 1990년에 비해서 2005년에 남성은 미혼율이 7.53% 낮아졌고, 여성은 7.0% 낮아짐
- 전국과 전북을 비교하면 전북이 전국보다 남녀 모두 미혼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북이 전통적인 결혼관이 우세함을 알 수 있음

<표2-9> 15세 이상 미혼율의 변화

(단위 : %)

구 분		1990	1995	2000	2005
전 국	남 성	38.23	35.94	35.13	35.09
	여 성	27.78	25.71	25.14	25.38
전 북	남 성	40.29	36.45	34.52	32.76
	여 성	27.08	23.91	22.19	20.08

자 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인구통계연보』 각 년도.

* 미상제외

<표2-10> 시군별 15세 이상 미혼율

(단위 : 명, %)

구 분	여 성	남 성
계	154,116	229,084
전주시	68,940 (44.73)	88,345 (38.56)
군산시	21,100 (13.69)	34,402 (15.02)
익산시	29,529 (19.16)	42,388 (18.50)
남원시	5,078 (3.29)	9,061 (3.96)
정읍시	7,094 (4.60)	12,002 (5.24)
김제시	5,680 (3.69)	10,471 (4.57)
완주군	6,536 (4.24)	11,478 (5.01)
고창군	2,542 (1.65)	5,044 (2.20)
부안군	2,582 (1.68)	5,218 (2.28)
임실군	839 (0.54)	2,055 (0.90)
순창군	1,041 (0.68)	2,236 (0.98)
무주군	947 (0.61)	1,975 (0.86)
진안군	1,339 (0.87)	2,669 (1.17)
장수군	869 (0.56)	1,794 (0.78)

자 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5.

- 전북의 시군별 15세 이상 미혼율을 보면(<표2-10>참조), 전주시를 제외한 전 시군이 남성의 미혼율이 높게 나타남
- 이는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결혼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며, 특히, 농촌경제의 열악함이 남성결혼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농촌지역의 남성들은 국제결혼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임

4. 이혼율 및 재혼율

- 이혼율 및 재혼율은 15년 동안 전국과 전북 모두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이혼율의 경우 2005년 43.85%로 1990년 8.44%에 비해 5배 증가하였음 .이는 전국의 이혼율의 증가보다 높음
 - 이러한 이혼의 증가는 한부모 가정 발생이 높아져 출산력 저하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음

- 재혼율의 상승은 재혼가정의 출산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이의 영향력은 매우 약함

<표2-11> 이혼율 및 재혼율의 변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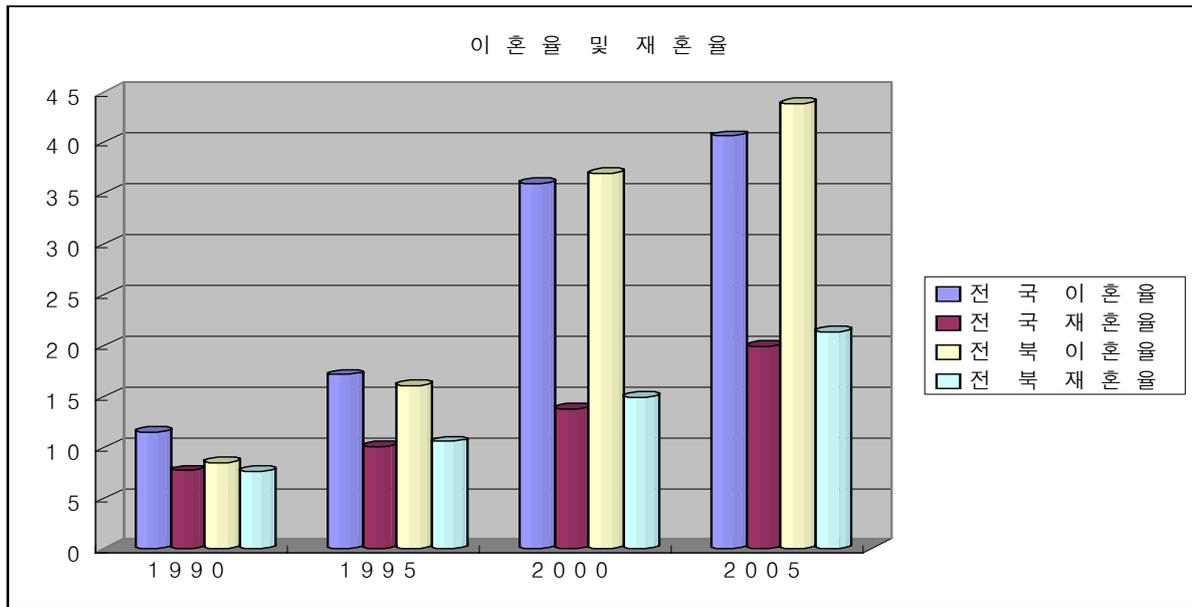
구 분		1990	1995	2000	2005
전 국	이혼율	11.44	17.13	35.92	40.61
	재혼율*	7.7	10.00	13.76	19.98
전 북	이혼율	8.44	16.02	36.97	43.85
	재혼율*	7.58	10.55	14.89	21.38

자 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 년도.

전라북도 『전북통계연보』.

주 : 이혼율 : 이혼수×100/혼인수 *재혼율 : 재혼수×100/혼인수

*는 여성재혼과 남성재혼의 평균 비율



<그림2-6> 이혼율 및 재혼율

제 3 절 출산관련 현황

1. 출산율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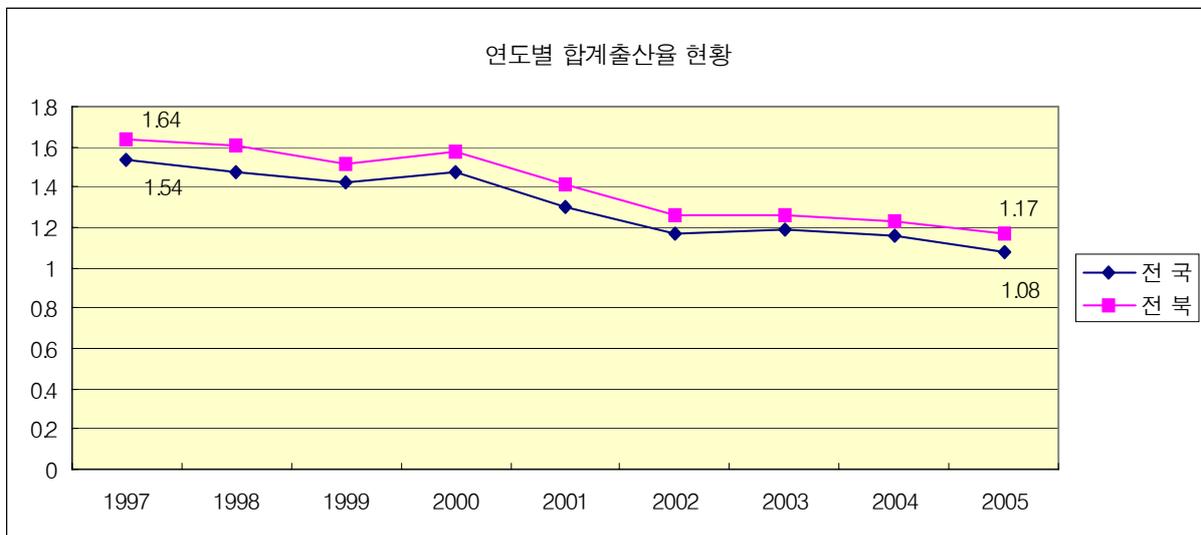
- 전라북도의 2005년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전국 중위권(8위)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1.0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에 있으며, 전국과 전북의 합계 출산율 모두 하락추세에 있음
 -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전국의 합계출산율에 비해서는 약간 높으나, 총 인구수가 유사한 충남(1.26)과 전남(1.28)에 비해서 낮은 수준임

<표2-12> 연도별 합계출산율 현황

(단위 : 명)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 국	1.54	1.47	1.42	1.47	1.30	1.17	1.19	1.16	1.08
전 북	1.64	1.61	1.52	1.58	1.41	1.26	1.26	1.23	1.17

자 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그림2-7> 연도별 합계출산율 현황

2. 출생아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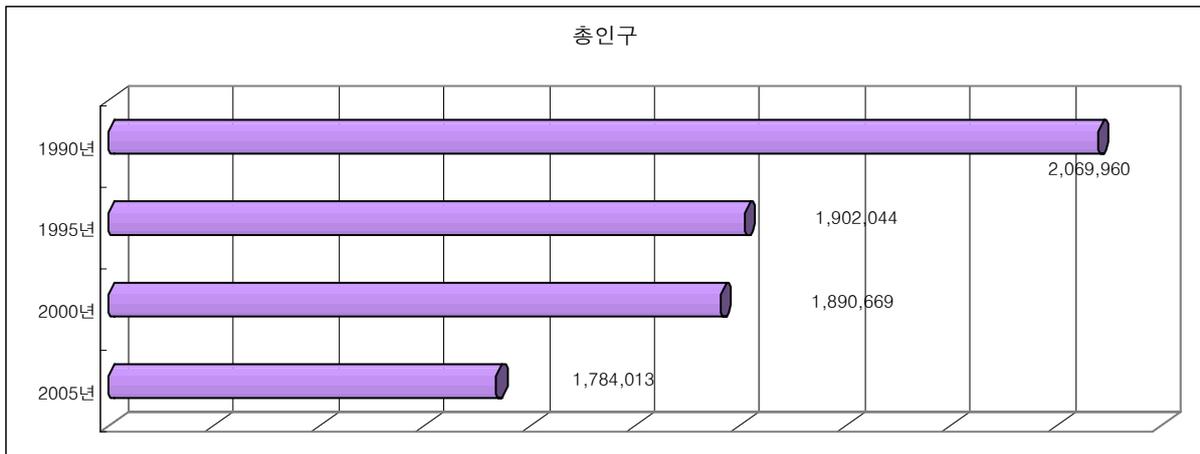
- 1990년 이후 전북의 총인구는 13.8% 감소하였고, 출생아수는 34.3% 감소함
 - 출생아수의 감소율은 전국과 유사함
 - 총인구의 감소에 비해 더 높은 출생아수의 감소로 전북지역의 심각한 사회문제의 발생이 우려됨
 - 특히 2000년 이후 감소가 두드러져 2005년까지 5년동안 9,317명이 감소하여 그 시기의 감소가 가장 큼

<표2-13> 연도별 전북의 총인구 및 출생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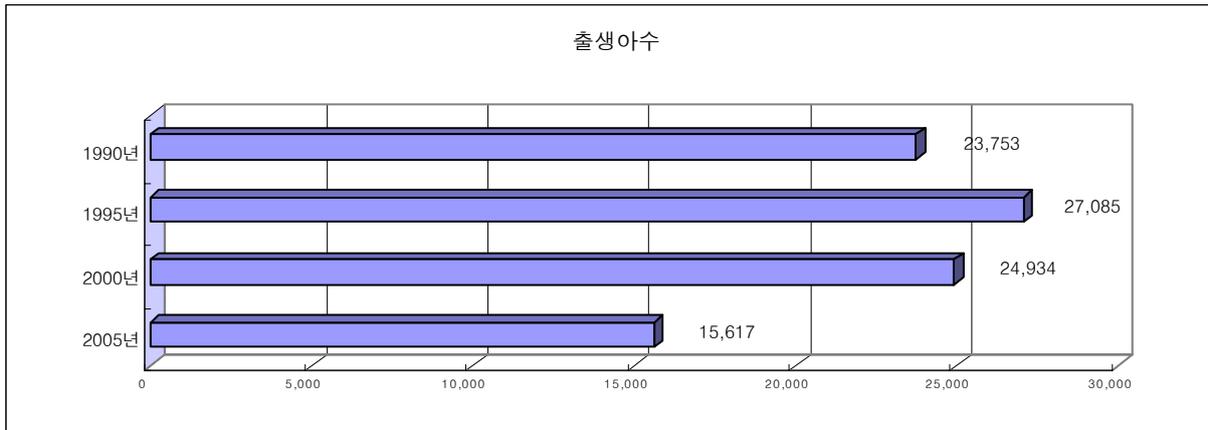
구 분		1990년(A)	1995년	2000년	2005년(B)	증감(A-B)
총인구	전 국	43,410,899	44,608,726	46,136,101	47,278,951	3,868,052(8.9%)
	전 북	2,069,960	1,902,044	1,890,669	1,784,013	-285,947(-13.8%)
출생아수	전 국	652,114	716,993	636,780	438,062	-214,052(-32.8%)
	전 북	23,753	27,085	24,934	15,617	-8,136(-34.3%)

(단위 : 명)

자 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동태조사』 각 년도.



<그림2-8> 연도별 전북의 총인구 변화



<그림2-9> 연도별 전북의 출생아수 변화

3. 가임여성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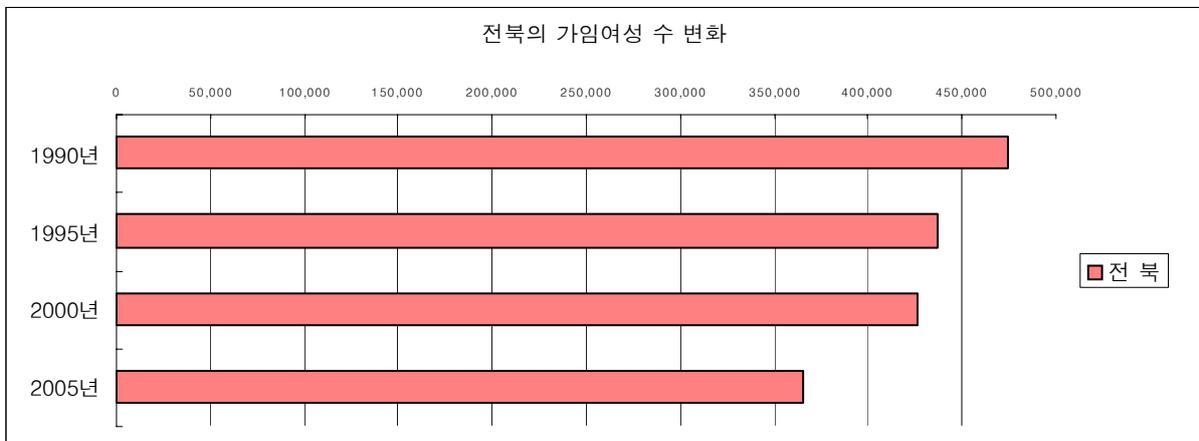
- 전북의 가임여성수는 1990년 이후 15년동안 23.0% 감소하였음
 - 전국의 감소율(1.24%)에 비해 전북의 감소율(23.0%)은 매우 큰 차이를 보임
 - 가임여성수의 감소로 인해 출산율의 저하 발생할 우려가 있음

<표2-14> 가임여성수의 변화

(단위 : 명, %)

구 분	1990년(A)	1995년	2000년	2005년(B)	증감(A-B)
전 국	11,298,455	11,608,368	11,698,746	11,157,981	-140,474(-1.24)
전 북	474,329	437,451	426,403	365,226	-109,103(-23.0)

자 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동태조사』 각 년도.



<그림2-10> 전북의 가임여성수 변화

4. 출산순위별 출생

- <표2-15>은 출산순위별 출생아수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음
- 출생아수의 비율은 1990년대 이후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고 전국과 전북의 양상도 비슷함. 대체로 첫째아 비율이 제일 높고 둘째, 셋째의 순임
- 그러나 첫째, 둘째아의 출생비율이 각각 40% 이상을 보이는 반면, 셋째아 출생비율은 10%대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임. 즉, 한국 출생아의 90% 정도는 첫째 아니면 둘째로 태어난다고 볼 수 있음. 전북은 전국에 비해 첫째아의 비율이 낮고 둘째, 셋째아 비율이 높은 편임

<표2-15> 출산순위별 출생

(단위 : 명, %)

지역	출산순위	연도			
		1990	1995	2000	2005
전국	계	652,144 (100.0)	716,993 (100.0)	636,780 (100.0)	438,062 (100.0)
	첫째아	349,319 (53.6)	346,119 (48.3)	229,617 (36.1)	224,863 (51.3)
	둘째아	253,835 (38.9)	308,761 (43.0)	269,022 (42.2)	167,867 (38.3)
	셋째아 이상	48,754 (7.5)	61,493 (8.6)	66,295 (10.4)	41,756 (9.5)
	미상	236 (0.04)	620 (0.08)	1,846 (0.3)	3,576 (0.8)
전북	계	23,753 (100.0)	27,085 (100.0)	24,934 (100.0)	15,617 (100.0)
	첫째아	11,319 (47.6)	12,234 (45.2)	10,907 (43.7)	7,050 (45.1)
	둘째아	9,232 (38.8)	10,823 (40.0)	10,131 (40.6)	6,141 (39.3)
	셋째아 이상	3,201 (13.5)	4,026 (14.8)	3,860 (15.5)	2,257 (14.4)
	미상	1 (0.00)	2 (0.00)	36 (0.1)	169 (1.1)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 각 연도.

5. 출생성비의 변화

- 출산율 저하에 기여한 또 하나의 원인은 남녀 성비 불균형적 출산현상이라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음, 그러나 이러한 출생 성비의 문제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완화되었음

- <표2-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북은 전국 보다 출생 자녀의 성에 집착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1990년에는 여아 100명당 남아113.76명을 기록하며 성비불균형적 출생을 기록함
- 2005년의 경우는 1990년보다 더 높아져 자연성비 104명보다 12.67명이 더 많으며, 전국(107.7명) 보다 8.97명 더 많음
- 호주제 폐지와 남녀평등의식의 강화로 남아 선호 경향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지역의 정서가 아직 남아 있음

<표2-16> 출생성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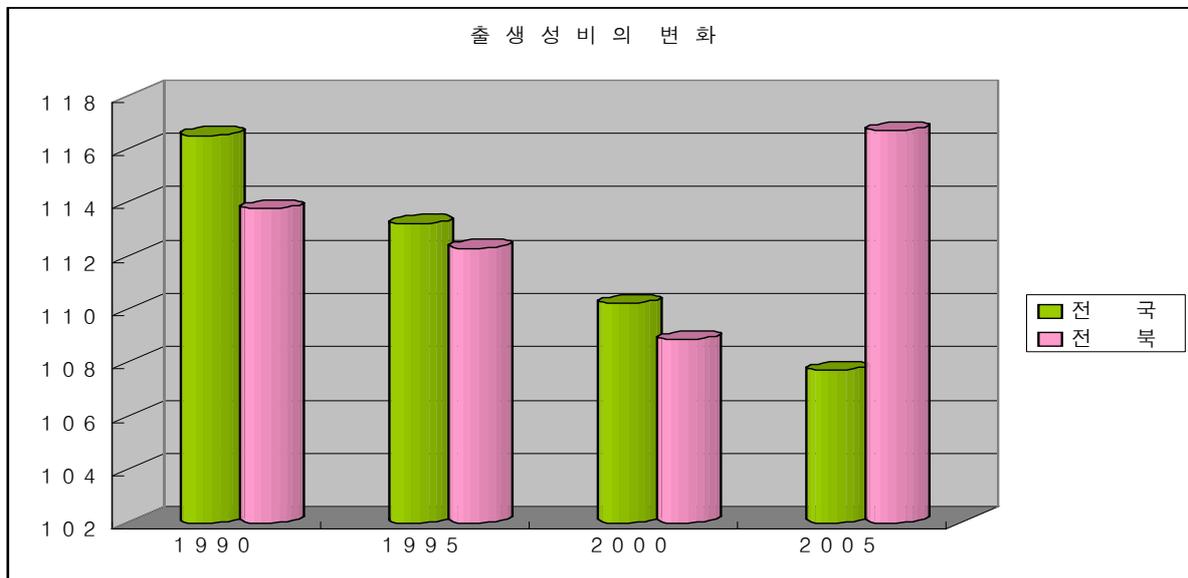
(단위 : 명)

지 역	1990	1995	2000	2005
전 국	116.5	113.2	110.2	107.7
전 북	113.76	112.28	108.84	116.67

자 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전라북도 『전북통계연보』 각 년도.

* 출생성비 : 여아 100명당 남아수.



<그림2-11> 출생성비의 변화

제 3 장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정책

- 제 1 절 중앙정부의 출산정책
- 제 2 절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정책 및 평가

제 3 장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정책

제 1 절 중앙정부의 출산정책

1. 출산정책 추진경위

1) 참여정부 이후 국가적 정책의제로 설정

- 2002년도 합계출산율 1.17명 발표를 계기로 학계, 언론 등에서 저출산 현상의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 증가하게 되었음
- 각계에서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및 연금재정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
-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 전략」을 마련하여 대통령 보고하였음
- 이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하기 시작함

2) 저출산 종합대책 마련 추진

- 국무조정실 주관 '저출산대책 추진기획단' 구성하고 운영하게 되었음
 - 저출산 문제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12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참여하여 관계장관 및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 함
 - ※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방부 등 참여
- 저출산 관련 연구 추진
 - 저출산 원인의 미세분석 및 정책 선호도 조사 실시하여 저출산 원인을 찾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함
 - 국책연구기관·민간연구기관 보고서 분석, 외국사례 분석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적정인구규모 및 적정출산율 추계연구를 통해 포괄적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를 접근
- 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대책팀”을 통한 다양하고 다각적인 저출산 문제에 대한 연구를 실시
- 「2005 국가비전 당·정 워크샵」을 실시하여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 대책 추진방향을 논의함 (정치권에서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음)
- 사회 각계각층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을 펼침
 - 간담회·공청회 등을 통한 정책공동체 활성화로 정책방안 모색
 - 경제계·국회의원·지자체(부단체장)·여성계 등 분야별 릴레이 간담회 및 전문가 회의 및 전국 지역별 순회 간담회 실시를 통해 저출산 문제점 공유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함
 - 국회 ‘저출산 및 고령사회대책 특별위원회’ 공청회를 통한 국민 의견수렴
- 온라인을 통한 국민참여 및 저출산 문제의식 공유를 위한 노력을 펼침
 - 인터넷을 통한 정부·지자체 출산지원시책 종합정보 제공
 - ※ 포털사이트 아가사랑 www.aga-love.org 구축
 - 저출산대책 네이밍 인터넷 공모를 통해 국민적 관심을 유도
-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저출산고령화대책시민연대’ 구성

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2005. 9. 1일 시행)

- 저출산 및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2005. 5. 18 공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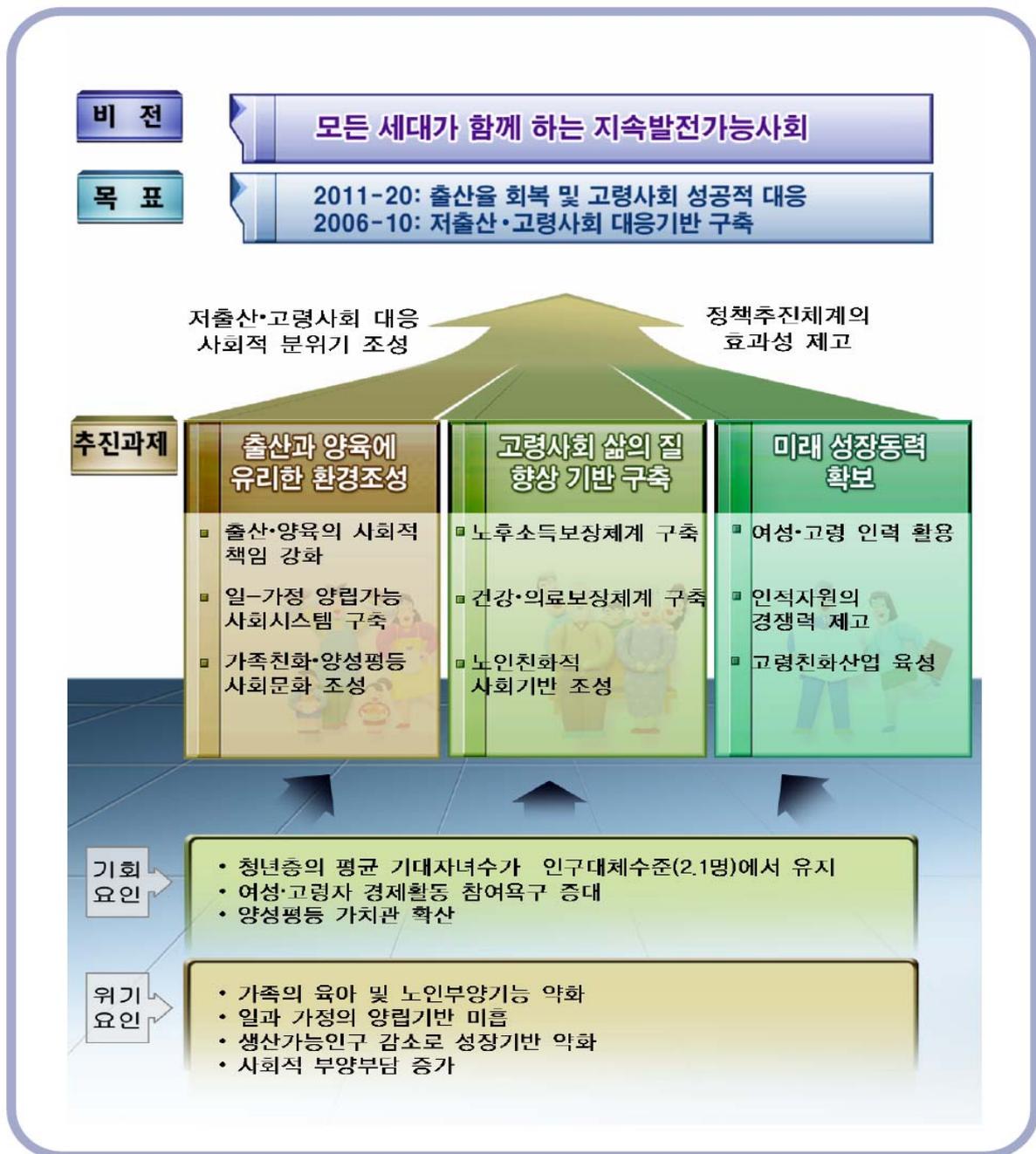
4)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위원회 및 부서 설치

-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본부」 설치하고 체계적인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시작함

5)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함
 - 정부의 세부시행계획 수립, 자원 규모·조달방안 마련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국가의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지자체도 시행계획 수립·시행하도록 함

2. 중앙정부의 출산정책 방향



<그림3-1> 중앙정부의 출산정책 방향

- 중앙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가 가족의 육아 및 노인부양기능을 약화시키고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로 성장기반이 약화되며 사회적 부양부담이 증가된다는 위기의식 하에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게 되었음
- 중앙정부의 출산정책 추진방향은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발전 가능사회를 위해서 2006년~2010년까지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그 후 2011년~2020년까지는 출산율을 회복하고 고령사회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과제를 설정함
- 추진과제로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을 구축하며,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설정
- 특히 저출산·고령사회의 대응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과 정책추진체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음

3. 중앙정부의 출산정책

- 중앙정부의 출산정책은 아래의 <표3-1>에서 볼 수 있듯이 임신 및 출산관련 지원, 세제지원, 일과가정의 양립 지원, 육아관련 지원의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분류해 볼 수 있음

<표3-1> 중앙정부의 출산정책 개요

분야별		정부지원시책
임신·출산 관련 지원	임신·출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6세 미만 아동 입원시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 진료비 면제('05. 12) ○ 불임부부의 시험관 시술비 지원('06) ○ 저소득층 둘째아 이상 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06)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산급여 지원(50만원, '06) - 쌍태아 75만원 ○ 정·난관 복원수술 보험적용('04. 7) ○ 주요 산전검사(기형아검사·풍진검사) 보험급여 확대('04. 12) ○ 자연분만시 본인부담 진료비 면제('05. 1)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본인부담 진료비 면제('05. 1)
	임산부·영유아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신생아에 대해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확대 실시(2종→6종)('06)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체중별로 300만원~700만원까지 차등지원)('04) ○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87) ○ 성장·발달검사(screening) 등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01)

<표3-1> 중앙정부의 출산정책 개요(이어서)

분야별	정부지원시책
<p>세제지원</p>	<p><자녀1인당 소득공제규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및 자녀 1인당 100만원 공제('95) - 6세이하 자녀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04) ○ 교육비('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교육비 : 1인당 200만원 한도 - 초중고생 : 1인당 200만원 한도 - 대학생 : 1인당 700만원 한도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 의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를 위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초과 금액 소득공제 (연500만원 한도, '03) ○ 보험료 : 자녀를 위한 보장성 보험료(연100만원 한도, '03) ○ 출산보육수당에 대하여 월 10만원 비과세('04)
<p>일과가정의 양립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전후휴가 : 출산근로자 90일간 산전후휴가부여('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전후휴가급여 90일분 사회부담 확대 ('06, 대기업 제외, 종전 30일분 사회부담) - 유사산휴가제 도입('06, 임신16주이상) ○ 육아휴직 : 만1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근로자('08년부터는 만3세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 육아휴직수당(월40만원, '04) - 사업주 : 육아휴직장려금(20만원, '01), 대체인력채용장려금(20~30만원, '06) ○ 직장보육시설설치기준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근로자 300인이상(중전) 또는 남녀근로자 500인이상('06) ○ 직장보육시설지원강화(시설비 2억무상, 교재교구비 5천만원 무상지원, 보육교사인건비 월 80만원, '06)
<p>육아지원 ('06년) *중전사업의 지원수준 상향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차등보육·교육비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70%이하 (정부보육료 단가의 40~100%) ○ 만5세아 무상보육·교육비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90%이하(월158천원) ※ 농어촌지역은 도시근로자가구평균소득100%이하 ○ 두자녀이상 시설이용아동 추가 지원 : 도시근로자가구평균소득이하(105천원~47천원) ○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운영비 지원 (249천원~69천원) ○ 장애인 무상보육비(월350천원)·유치원 교육비 ○ 농업인 영유아 보육·교육비(시설이용시) : 5ha미만 농어가 가구(정부보육료단가의 50%)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 5ha미만 농어가 가구(정부보육료단가의 25%)

'06년 3월 현재 ※ ()는 사업시작 및 확대시행년도

- 임신·출산관련 정책 중 불임부부의 시험관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해산급여 지급이 '2006년 새로 시행된 주요 사업들이고, 그 외에 정·난관 복원수술 보험적용 및 주요 산전검사, 자연분만 시 본인부담 진료비 면제,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본인부담 진료비 면제 등의 정책이 있음

-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은 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유사산휴가제 도입, 육아휴직장려금 및 육아휴직대체인력 채용장려금 지급, 직장보육시설설치기 준강화 및 직장보육시설지원강화가 그 내용에 해당함
- 육아지원 내용은 저소득층 차등보육·교육비 지원, 만5세아 무상보육·교육비 지원, 두자녀 이상 시설이용아동 추가지원,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운영비 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비·유치원 교육비 지원, 농업인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세제지원은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와 교육비공제, 의료비 공제, 보험료 공제, 출산보육수당에 대하여 월 10만원 비과세 등을 지원하고 있음

제 2 절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정책 및 평가

1.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정책

<표3-2>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정책

구 분	세 부 사 업 내 용
결 혼	농촌총각 장가보내기(2), 미혼남녀 맞선보기(1)
임 신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21), 정·난관 복원수술비지원(4), 불임부부 검진 및 치료비 지원(3),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65), 철분제 및 영양제 지급(160)
출 산	출산지원금(138), 출산용품(72), 신생아 보험지원(6), 농가/보육도우미(38), 아기탄생 및 결혼 축하엽서(36), 무료예방접종(14)
자녀양육	보육료 지원(140), 양육비 지원(11),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13)

()안의 숫자는 시·군(구) 개수임

-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지원 정책들을 결혼, 임신, 출산 및 자녀양육의 생애경로단계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음
 -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미혼남녀들이 적령기에 결혼하여 원하는 자녀수를 출산

하고 양육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지원시책 들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미혼남녀 맞선보기 등이 해당됨. 그러나 이러한 시책들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극히 일부임

- 임신관련 지원 시책들로 신혼부부 건강검진, 철분제 및 영양제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 등이 추진되고 있음
- 출산과 관련한 지원시책들로는 출산지원금 지급, 출산용품 제공, 신생아 보험지원, 농가도우미/보육도우미 지원 등이 추진되고 있음. 출산 지원 시책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 대부분은 주로 출산지원금(155개 지역) 또는 출산용품(72개 지역)을 채택하였음
- 자녀양육과정에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도 상당수(140개)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만 양육비용 및 보육시설에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음

2. 전라북도의 출산정책

<표3-3> 전라북도 및 시군의 출산정책

	임신관련 정책	출산관련 정책	양육관련 정책
전라북도		· 출산 지원금 · 농가 도우미 지원	·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전 주 시	· 임신부 영양제 보급 · 임신부 구강관리	· 탄생축하 안내문 발송	
군 산 시	· 임신부 영양제 보급	· 출산 육아용품 지원	
익 산 시		· 출산 지원금	
남 원 시	· 임신부 영양제 보급	· 탄생축하 안내문 발송	· 공무원자녀 보육비지원
정 읍 시		· 출산 지원금	
김 제 시	· 임신부 영양제 보급	· 탄생축하 안내문 발송	· 공무원자녀 보육비지원 · 예방접종 · 영유아 영양제 보급
완 주 군		· 출산 육아용품 지원	
임 실 군		· 출산 지원금	
순 창 군	· 임신부 영양제 보급	· 출산 지원금 · 출산 육아용품 지원	· 공무원자녀 보육비지원 · 양육 지원금
무 주 군		· 출산 지원금	· 저소득층 양육비 지원
진 안 군	· 임신부 영양제 보급 · 산부인과 무료진료		
장 수 군	· 임신부 영양제 보급 ·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 정·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 출산 지원금	· 모유수유용품 지급
고 창 군	· 임신부 영양제 보급 · 임신부 건강교실 운영	· 출산 지원금	
부 안 군	· 임신부 영양제 보급 ·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 임신부 건강교실 운영	· 출산 지원금 · 출산 육아용품 지원 · 출산 요양비	

자료 :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시책』, 보건복지부(2006), 재구성.

- 2005년 말을 기준으로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실시하고 있는 출산정책은 위의 <표3-3>과 같이 임신관련 정책, 출산관련 정책, 양육관련 정책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에 따라서 분야별로 시행하는 정책의 내용은 상이함
 - 시지역 보다는 군지역이 출생아 수가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내용도 많고 지원금액도 더 높음
 -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3-4>에서 <표3-6>을 보면 알 수 있음

<표3-4> 전라북도 및 시군의 출산정책 - 임신관련 정책

사업명	시행지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05년 실적
	대민접촉창구			
임산부 영양제보급	전주시	총20,000천원 (시100%)	○대상 : 등록 임산부 ○인원 : 1,500명 ○내용 : 임신5개월부터 지급	2,939명
	보건소			
임산부 구강관리	전주시	총1,500천원 (시100%)	○대상 : 등록 임산부 ○내용 : 임부 구강보건교육	76명
	보건소			
임산부 영양제보급	군산시	총62,400천원 (시100%)	○대상 : 임신20주~산후3개월까지 등록 임산부 ○인원 : 800명	1,328명
	보건소			
임산부 영양제보급	남원시	총2,052천원 (시100%)	○대상 : 임신 5개월부터 산후1개월 까지 ○인원 : 650명	664명
	보건소			
임산부·영유아 영양제보급	김제시	총6,000천원 (도6.6%) (시93.4%)	○대상 : 임신20주~분만2개월까지, 0~6세 영유아 ○인원 : 450명	437명
	보건소			
임산부 영양제보급	진안군	총3,000천원 (군100%)	○대상 : 등록 임산부 ○인원 : 50명 ○내용 : 1인당 6만원 상당	112명/ 1인 6만원 상당
	보건소			
산부인과 무료진료	진안군	총1,080천원 (군100%)	○대상 : 등록 임산부 ○인원 : 70명	147명
	보건소			
임산부 영양제보급	장수군	총1,500천원 (군100%)	○대상 : 등록 임산부 ○인원 : 100명	100명
	보건의료원			
태아 기형아 검사비	장수군	총900천원 (군100%)	○대상 : 임신20주이내 임산부 ○인원 : 20명	18명
	보건의료원			
정·난관 복원기술비 지원	장수군	총4,750천원 (군100%)	○대상 : 출산을 위하여 복원기술을 원하는자 ○인원 : 정관 5명(35만원), 난관 5명(60만원)	-
	보건의료원			
임산부 영양제보급	순창군	총2,500천원 (군100%)	○대상 : 등록 임산부 ○인원 : 8명	75명
	보건의료원			
영양제 및 신생아용 담요 외 2종	고창군	총5,648천원 (군100%)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94명 ○내용 : 1인당 60천원	1인당 40천원
	보건소			
임산부 건강교실 프로그램운영	고창군	총1,580천원 (군100%)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40명 ○내용 : 1인 39,500원	30명/ 1인 50천원
	보건소			

<표3-4> 전라북도 및 시군의 출산정책 - 임신관련 정책(이어서)

사업명	시행지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05년 실적
	대민접촉창구			
임산부 영양제공급	부안군	총2,640천원 (군100%)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150명	150명
	보건소			
임산부 산전 기형아검사	부안군	총24,000천원 (군100%)	○대상 : 등록 임산부 ○인원 : 40명 ○내용 : 1인 80천원	40명
	보건소			
임산부 건강교실	부안군	총900천원 (군100%)	○대상 : 등록 임산부 ○인원 : 100명 ○내용 : 1인당 9천원	100명
	보건소			

자료 :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시책』, 보건복지부(2006).

- 먼저 전라북도 및 시·군의 임신관련 정책들을 살펴보면, 임산부 영양제공급(공급)이 9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어 가장 많은 사업으로 나타남
- 2개의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과 정·난관 복원시술비 지원으로 장수군과 부안군에서 지원하고 있음
- 한 자치단체만이 시행하고 있는 임신관련 정책으로는 임산부 구강관리(전주시), 산부인과 무료진료(진안군), 정·난관 복원시술비 지원(장수군)이 있음

<표3-5> 전라북도 및 시군의 출산정책 - 출산관련 정책

사업명	사업추진체계 (대민접촉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05년 실적
출산지원금	도자체	총489,000천원 (도30% 시군70%)	○대상 : 셋째아 이상 ○인원 : 1,630명 ○내용 : 300천원	671명
농가도우미지원	도자체	총364,800천원 (도25%) (시군65%) (자부담10%)	○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인원 : 304명 ○내용 : 1일 30천원 (1인/ 1,200천원)	300명
출산지원금	익산시	총200,000천원 (시100%)	○대상 : 둘째아 이상 ○인원 : 1,000명 ○내용 : 둘째 : 200천원, 셋째아 이상 : 400천원	1,278명 255,600천원
	보건소			
출산지원금	정읍시	총155,080천원 (시100%)	○내용 - 장려금 : 2자녀 : 200천원, 3자녀 : 300천원 - 건강보험 : 2자녀이상 (남 19,970원, 여 19,330원)	장려금406명 건강보험132명
	보건소			
탄생축하 안내문발송	전주시	총2,000천원 (시100%)	○대상 : 관내 신생아 ○내용 : 탄생축하 및 예방접종 안내	5,584명
	보건소			
탄생축하 안내문발송	남원시	총180천원 (시100%)	○대상 : 관내 신생아 ○인원 : 600명 ○내용 : 월2회	589명
	보건소			
탄생축하전보	김제시	총2,000천원 (시100%)	○대상 : 관내 신생아 ○인원 : 500명	455명
	보건소			
출산 육아용품지원	군산시	총45,000천원 (시100%)	○대상 : 등록 임신부 ○인원 : 900명 ○내용 : 1인 50천원 상당	-
	보건소			
출산지원금	무주군	총75,000천원 (군100%)	○대상 : 관내 신생아 ○인원 : 150명 ○내용 : 1인 500천원	134명/ 1인 500천원
	보건의료원			
출산지원금	장수군	총8,000천원 (군100%)	○대상 : 둘째아 ○인원 : 40명 ○내용 : 1인 200천원	37명/ 1인 200천원
	보건의료원			
출산지원금	임실군	총30,000천원 (군100%)	○인원 : 100명 ○내용 - 첫째아 : 200천원 - 둘째아 : 300천원 - 셋째아 : 500천원	-
	보건의료원			
출산지원금	고창군	총123,800천원 (군100%)	○대상 : 관내 신생아 ○인원 : 420명 ○내용 - 첫째아 : 200천원 - 둘째아 : 300천원 - 셋째아 : 500천원	셋째아: 68명 / 1인 300천원
	보건소			
출산지원금	순창군	총70,000천원 (군100%)	○대상 : 첫째, 둘째아 ○인원 : 140명 ○내용 : 1인 500천원	145명/ 1인 300천원
	보건의료원			
출산지원금	순창군	총90,000천원 (군100%)	○대상 : 셋째아 이상 ○인원 : 30명 ○내용 : 1인 3,000천원	-
	보건의료원			

<표3-5> 전라북도 및 시군의 출산정책 - 출산관련 정책(이어서)

사업명	사업추진체계 (대민접촉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05년 실적
임산부 신생아 건강샐트 지급	순창군	총2,200천원 (군100%)	○대상 : 임산부, 신생아 ○인원 : 110명 ○내용 : 1인 2만원	110명/ 1인 2만원
	보건의료원			
출산지원금	부안군	총10,000천원 (군100%)	○대상 : 셋째 출생아 ○인원 : 100명 ○내용 : 1인 100천원	-
	보건소			
출산 육아용품지원	부안군	총7,200천원 (군100%)	○대상 : 셋째 출생아 ○인원 : 100명 ○내용 : 1인 72천원	-
	보건소			
출산요양비	부안군	총20,000천원 (군100%)	○대상 : 셋째 출생아 ○인원 : 100명 ○내용 : 1인 200천원	-
	보건소			
출산 육아용품지원	완주군	총20,000천원 (군100%)	○대상 : 셋째 출생아 ○인원 : 200명 ○내용 : 1인 100천원 상당	-
	보건소			

자료 :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시책』, 보건복지부(2006).

- 전라북도 및 시·군의 출산관련 정책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자치단체가 9개 지역임. 그러나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여부에 따라서 지원 기준과 금액이 다름
 - 첫째아부터 지원하는 시·군으로는 임실군(20만원)과 고창군(20만원), 순창군(50만원)이 있고, 둘째아 이상 지원하는 시·군은 익산시(20만원), 정읍시(20만원), 장수군(20만원)이 있음. 셋째 이상 지원금을 지급하는 자치단체는 순창군(30만원), 부안군(10만원) 그리고 전라북도(30만원)가 해당함
 - 이처럼 시·군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금액에 있어서의 차이는 아직 그리 크지 않음
- 출산 육아용품을 지원해 주는 자치단체는 군산시, 완주군, 순창군, 부안군 4개지역에 해당함. 육아용품 지원 비용은 2만원~10만원 사이임
- 탄생축하 안내문을 발송해 주는 자치단체로는 전주시와 김제시, 그리고 부안군임
- 특수한 시책으로 부안군의 출산 요양비 지급(셋째 출생아의 경우 20만원 지급)과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가도우미 지원이 있음

<표3-6> 전라북도 및 시군의 출산정책 - 양육관련 정책

사업명	사업추진체계 (대민접촉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05년 실적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도자체	총8,800,000천원 (도25%, 시75%)	○대상 :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고등학생 또는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인원 : 8,302명 ○내용 : 1인 1,060천원	7,220명
공무원자녀 보육비지원	남원시	총120,000천원 (시100%)	○대상 : 만5세이하 취학전 아동을 둔 남여 공무원 ○인원 : 125명 ○내용 : 1인 960천원	84명/ 72백만원 1인: 월 76,500원
	시자체			
공무원자녀 보육비지원	김제시	총100,000천원 (시100%)	○대상 : 시 산하 공무원자녀 0세-6세미만 ○인원 : 142명 ○내용 : 월5만원	168명
	시자체			
수두예방접종	김제시	총4,840천원 (시100%)	○대상 : 만1세 영유아 ○인원 : 466명	324명
	보건소			
공무원 자녀교육비	순창군	총106,560천원 (군100%)	○대상 : 관내 공무원 자녀 ○인원 : 148명 ○내용 : 1인당 6만원(10개월)	80명/ 1인 6만원
	보건의료원			
양육지원금	순창군	총84,000천원 (군100%)	○대상 : 모든 신생아 ○인원 : 140명 ○내용 : 월5만원 (12개월)	893명
	보건의료원			
영유아 영양제공급	진안군	총13,000천원 (군100%)	○대상 : 등록 영유아 ○인원 : 500명	372명/ 1인 3만원 상당
	보건소			
저소득층 양육비지원	장수군	총10,000천원 (군100%)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인원 : 20명 ○내용 : 1인 500천원	1명
	보건의료원			
모유수유용품지급	장수군	총3,450천원 (군100%)	○대상 : 등록 임산부 ○인원 : 30명 ○내용 : 유축기의 4종 지급	30명
	보건의료원			

자료 :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시책』, 보건복지부(2006).

- 전라북도의 및 시·군의 양육관련 정책 중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은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으로 남원시와 김제시 그리고 순창군에서 지원하고 있음
- 가장 많은 혜택을 주는 지자체는 순창군으로 출산지원금과 함께 양육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월5만원씩 12개월을 지급해 주고 있음
- 그 외에 전라북도 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과 김제시의 수두예방접종사업, 진안군의 영유아 영양제공급, 장수군의 모유수유용품 지급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

3. 전라북도의 출산정책 평가

- 앞의 항에서는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그 내용에 대해 설명했음. 본 절에서는 이와 같은 출산정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판단해 보고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음

1) 임신관련 정책 평가

- 전라북도 및 시·군의 임신관련 정책은 임신부 영양제 보급, 임신부 구강관리, 산부인과 무료진료,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정·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임신부 건강교실 운영의 총6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나,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임신부 영양제 보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 정책들은 한개 및 두개 자치단체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이 많지 않아 그리 큰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음

<표3-7> 전라북도 시군의 임신관련 정책

	임산부 영양제 보급	임산부 구강관리	산부인과 무료진료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정·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전라북도						
전주시	○	○				
군산시	○					
익산시						
남원시	○					
정읍시						
김제시	○					
완주군						
임실군						
순창군	○					
무주군						
진안군	○		○			
장수군	○			○	○	
고창군	○					○
부안군	○			○		○

자 료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정책』, 2006.

2) 출산관련 정책 평가

- 출산관련 정책으로는 출산 지원금 지급, 농가 도우미 지원, 탄생축하 안내문 발송, 출산 육아용품 지원, 출산 요양비 지급이 실시되고 있음
- 이 중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출산 육아용품을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4곳에 해당함

<표3-8> 전라북도 시군의 출산관련 정책

	출산 지원금	농가 도우미 지원	탄생축하 안내문 발송	출산 육아용품 지원	출산 요양비
전라북도	○	○			
전주시			○		
군산시				○	
익산시	○				
남원시			○		
정읍시	○				
김제시			○		
완주군				○	
임실군	○				
순창군	○			○	
무주군	○				
진안군					
장수군	○				
고창군	○				
부안군	○			○	○

자 료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정책』, 2006.

3) 양육관련 정책 평가

- 양육관련 정책은 임신, 출산과 관련된 정책보다 덜 활성화 되어 있고 지원의 수준도 미미함
- 양육관련 정책으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예방접종, 영유아 영양제 보급, 저소득층 양육비 지원, 모유수유용품 지급 등이 해당되나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육과 관련된 정책이 필요함

<표3-9> 전라북도 시군의 양육관련 정책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공무원자녀 보육비지원	예방접종	양육 지원금	영유아 영양제 보급	저소득층 양육비 지원	모유수유 용품지급
전라북도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					
정읍시							
김제시		○	○		○		
완주군							
임실군							
순창군		○		○			
무주군						○	
진안군					○		
장수군							○
고창군							
부안군							

자 료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정책』, 2006.

<<< 총평 >>>

- 전라북도 및 각 시·군의 출산관련 정책을 평가해보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 하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으나,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계가 있음

<<< 대안 >>>

- 재정이 수반되는 정책은 자원조달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회성에 그쳐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는 당사자만이 정책의 영향을 체감할 수 있음
- 따라서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성과 연령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도민들이 저출산의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대응책에 대해서 고민하는 계기를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각각의 계층과 대상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들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에서 출산관련 정책 예산을 많이 책정해야 함

제 4 장

출산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 조사

- 제 1 절 저출산 원인의 영향력 평가
- 제 2 절 정부의 분야별 정책의 중요성
- 제 3 절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정책 평가
- 제 4 절 전문가 정책 제안

제 4 장 출산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 조사

- 본 연구에서는 출산과 관련된 전라북도의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저출산 원인에 대한 평가 및 출산관련 요인의 영향력 정도, 그리고 각종정책제안 등을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음
- 본 장에서는 전문가 조사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고자 함

제 1 절 저출산 원인의 영향력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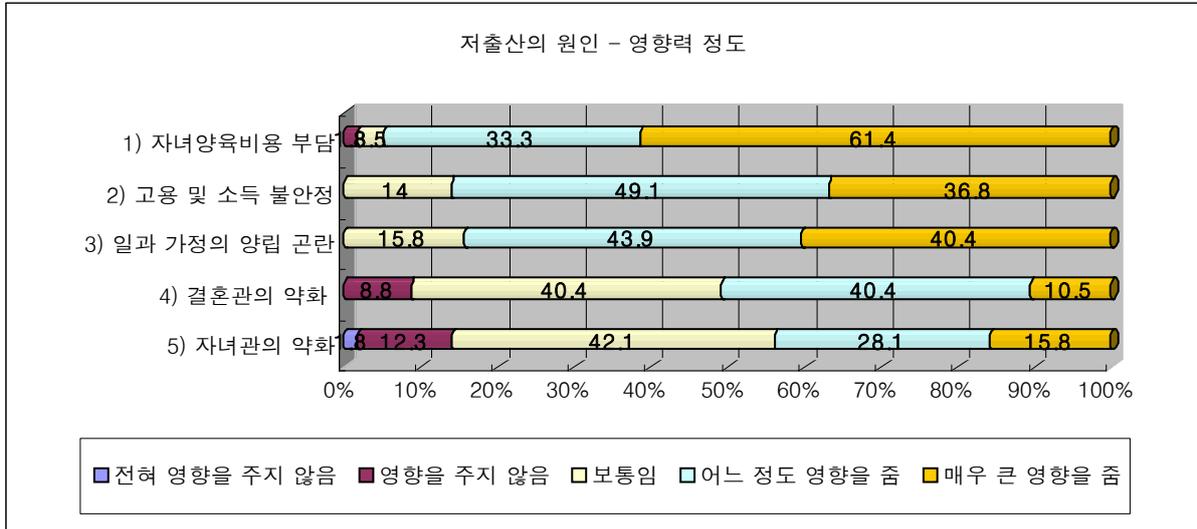
1. 저출산 원인의 영향력 평가

<표4-1> 저출산 원인의 영향력 평가

		(단위:명, %)					
	저출산의 원인 요인	합계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음	영향을 주지 않음	보통임	어느 정도 영향을 줌	매우 큰 영향을 줌
경제적 요인	1) 영유아 보육비, 초중고 사교육비 등 자녀양육비용 부담	57 (100.0)		1 (1.8)	2 (3.5)	19 (33.3)	35 (61.4)
	2) 결혼 · 출산연령층의 고용 및 소득 불안정	57 (100.0)			8 (14.0)	28 (49.1)	21 (36.8)
사회적 요인	3)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57 (100.0)			9 (15.8)	25 (43.9)	23 (40.4)
가치관 변화	4) 결혼관의 약화	57 (100.0)		5 (8.8)	23 (40.4)	23 (40.4)	6 (10.5)
	5) 자녀관의 약화	57 (100.0)	1 (1.8)	7 (12.3)	24 (42.1)	16 (28.1)	9 (15.8)

- 전문가 집단은 저출산 원인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보는 것은 영유아 보육비, 초중고 사교육비 등 자녀양육비용 부담에 관련된 경제적인 요인으로 봄(매우 큰 영향을 준다 61.4%)
 - 다음으로는 여성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곤란(40.4%)
 - 결혼 · 출산연령층의 고용 및 소득 불안정(36.8%)
 -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요인 중 가치관과 관련되어서는 어느 정도 영향은 주나 그리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따라서 저출산은 가치관의 변화보다는 경제적 비용과 이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그림4-1> 저출산 원인의 영향력 평가

2. 저출산 원인의 영향력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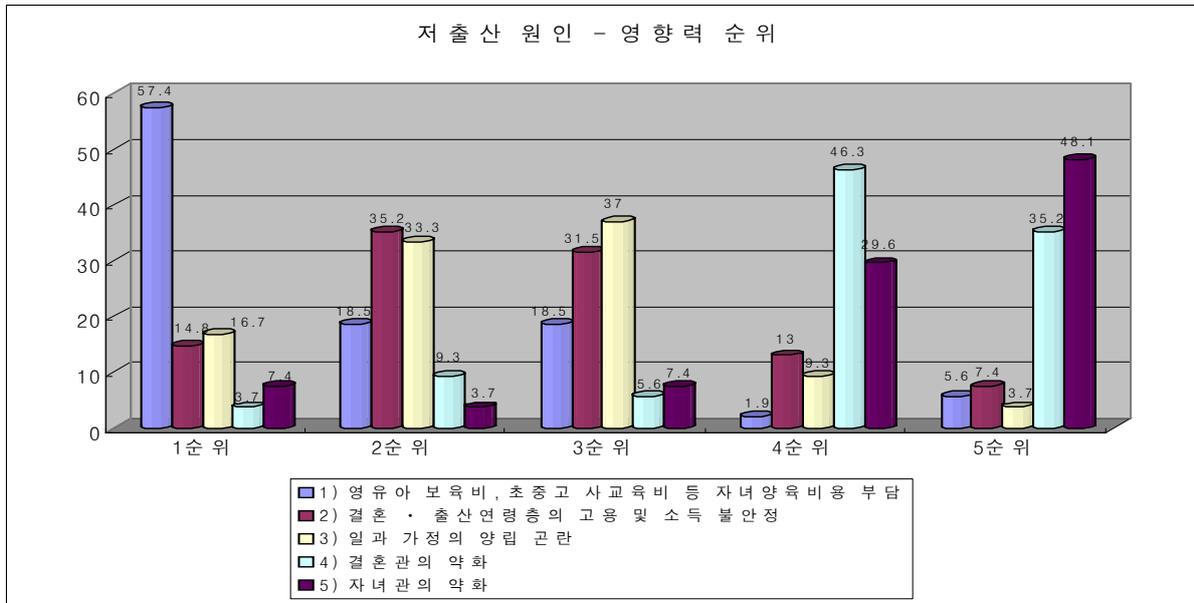
<표4-2> 저출산 원인의 영향력 순위

(단위:명, %)

저출산의 원인 요인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경제적 요인	1) 영유아 보육비, 초중고 사교육비 등 자녀양육비용 부담	31 (57.4)	10 (18.5)	10 (18.5)	1 (1.9)	3 (5.6)
	2) 결혼 · 출산연령층의 고용 및 소득 불안정	8 (14.8)	19 (35.2)	17 (31.5)	7 (13.0)	4 (7.4)
사회적 요인	3)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9 (16.7)	18 (33.3)	20 (37.0)	5 (9.3)	2 (3.7)
가치관 변화	4) 결혼관의 약화	2 (3.7)	5 (9.3)	3 (5.6)	25 (46.3)	19 (35.2)
	5) 자녀관의 약화	4 (7.4)	2 (3.7)	4 (7.4)	16 (29.6)	26 (48.1)

- 저출산 원인 요인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가장 큰 영향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1순위로는 영유아 보육비, 초중고 사교육비 등 자녀양육비용 부담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7.4%에 해당하였음

- 그 다음으로 1순위에서 영향력을 준다고 응답한 것은 일과 가정의 양립곤란으로 평가하여 저출산 원인의 영향력 정도에 대한 평가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음
- 여기에서도 출산관련 문제는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음



<그림4-2> 저출산 원인의 영향력 순위

- 저출산 원인에 대한 영향력 정도의 평가나 영향력 순위를 보았을 때의 시사점은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보육 및 교육비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가장 우선순위로 마련해야 하며, 다음으로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때 어려움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임
- 결혼관 및 자녀관의 약화에 대한 문제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결혼에 대한 진입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이러한 문제는 가치관이나 의식교육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제 2 절 정부의 분야별 정책의 중요성

<표4-3> 정부의 분야별 정책의 중요성 - 우선순위

(단위: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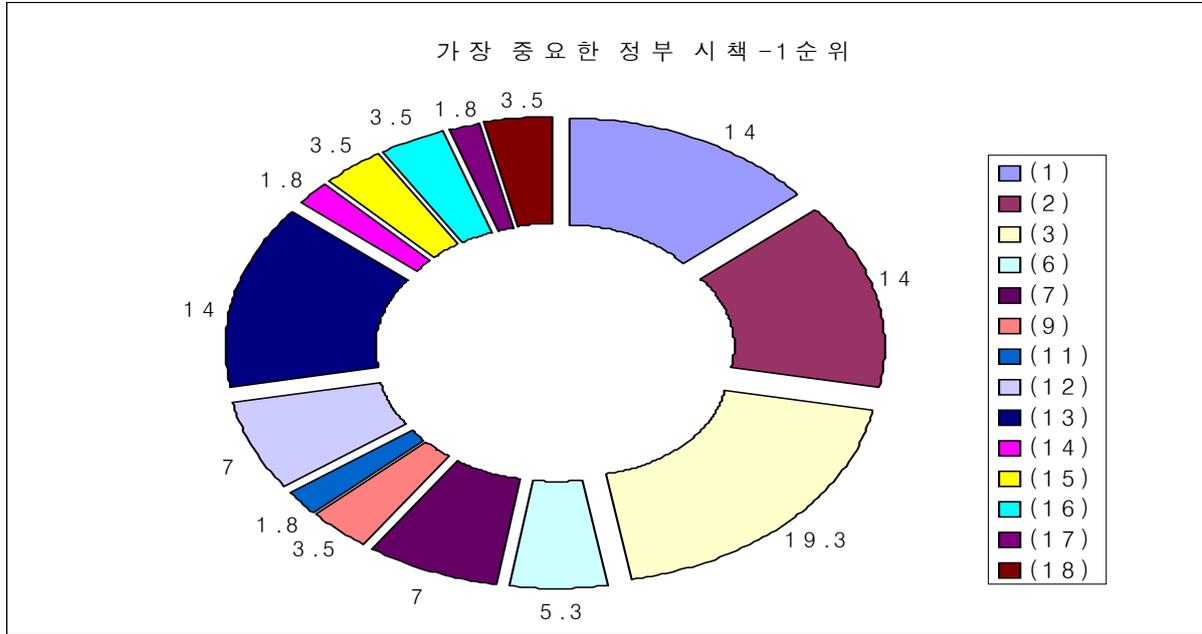
	1순위		2순위	
	명	%	명	%
1) 영유아 보육, 교육비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	8	14.0	10	17.5
2) 방과 후 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8	14.0	8	14.0
3)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11	19.3	6	10.5
4) 결혼 시 및 다자녀가정의 주거안정 지원	-	-	2	3.5
5) 입양아동 양육 지원 추진	-	-	-	-
6) 아동수당제도 도입 검토	3	5.3	2	3.5
7)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 확충 및 다양화	4	7.0	6	10.5
8) 민간 육아지원시설 서비스 개선	-	-	1	1.8
9)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2	3.5	3	5.3
10) 불임부부 지원 및 저소득층 산모도우미 파견	-	-	3	5.3
11) 산전후휴가 급여 등 지원확대	1	1.8	5	8.8
12) 육아휴직 지원 강화	4	7.0	1	1.8
13) 출산, 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8	14.0	6	10.5
14)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개선	1	1.8	1	1.8
15) 양성평등, 가족친화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강화	2	3.5	2	3.5
16) 친밀하고 평등한 가족생활문화 조성	2	3.5	-	-
17) 아동,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1	1.8	-	-
18) 아동, 청소년의 건전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2	3.5	1	1.8
합 계	57	100.0	57	100.0

○ 전문가 집단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분야별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평가 결과를 보면 1순위 결과로는

- 가장 우선순위 정책 :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19.3%)
- 다음 우선순위 정책 : 영유아 보육, 교육비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 (14.0%)
방과 후 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14.0%)
출산, 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14.0%)

○ 2순위에서는 가장 우선순위 정책으로 영유아 보육, 교육비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 (17.5%), 방과 후 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14.0%)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보육 및 교육비와 사교육비 경감 등 자녀양육 시 경제적인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음



- | | |
|--------------------------------|------------------------------------|
| 1)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 | 12) 육아휴직 지원 강화 |
| 2) 방과 후 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 13) 출산, 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
| 3)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 14)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개선 |
| 6) 아동수당제도 도입 검토 | 15) 양성평등, 가족친화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강화 |
| 7)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 확충 및 다양화 | 16) 친밀하고 평등한 가족생활문화 조성 |
| 9)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 17) 아동,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
| 11) 산전후휴가 급여 등 지원확대 | 18) 아동, 청소년의 건전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

<그림4-3> 정부의 분야별 정책의 중요성 - 우선순위

제 3 절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정책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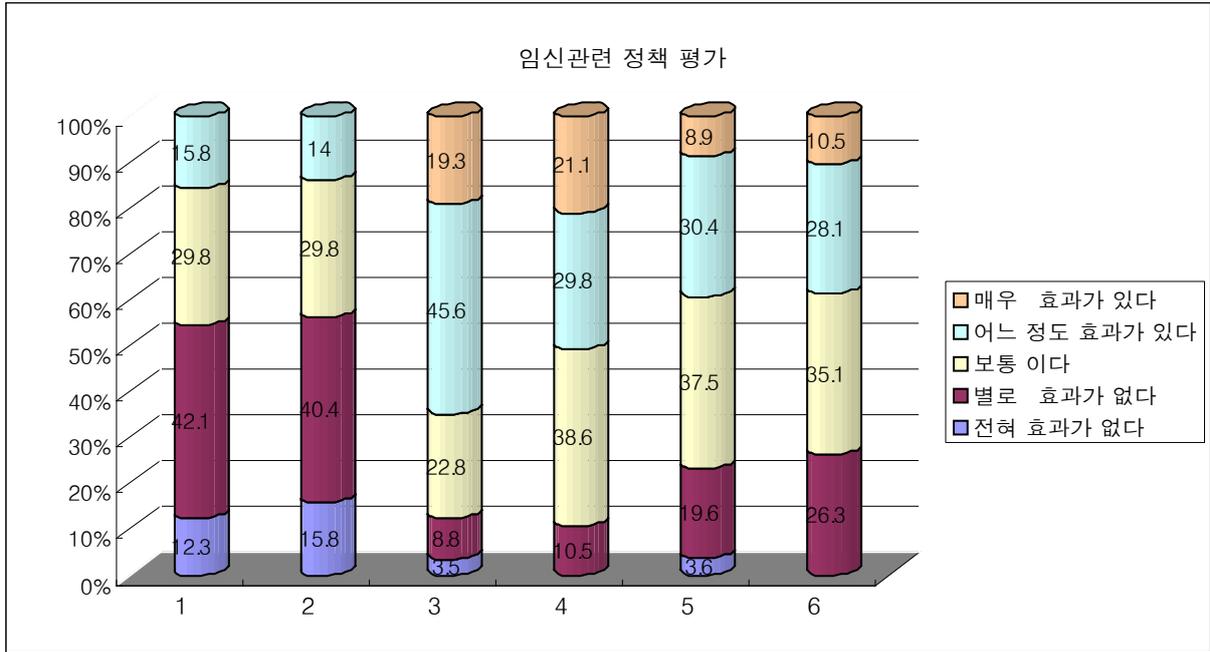
1. 임신관련 정책 평가

<표4-4> 임신관련 정책 평가

(단위: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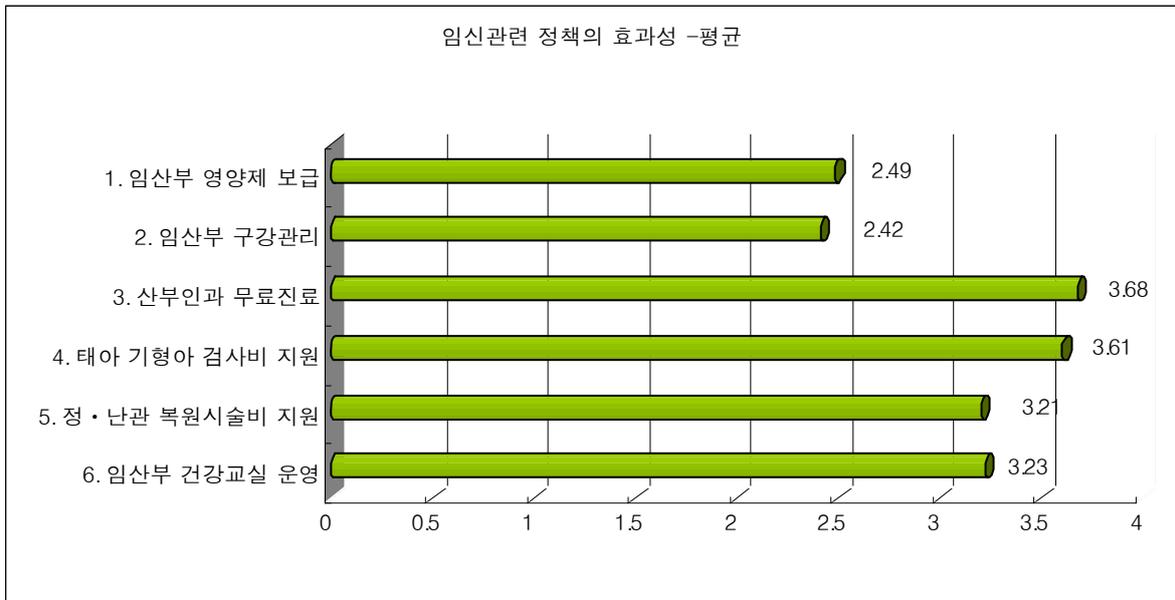
임신관련 정책	효과성 평가	전혀 효과가 없다	별로 효과가 없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매우 효과가 있다	합계	평균
1. 임신부 영양제 보급		7	24	17	9	-	57	2.49
		12.3	42.1	29.8	15.8	-	100.0	
2. 임신부 구강관리		9	23	17	8	-	57	2.42
		15.8	40.4	29.8	14.0	-	100.0	
3. 산부인과 무료진료		2	5	13	26	11	57	3.68
		3.5	8.8	22.8	45.6	19.3	100.0	
4.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	6	22	17	12	57	3.61
		-	10.5	38.6	29.8	21.1	100.0	
5. 정·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2	11	21	17	5	56	3.21
		3.6	19.6	37.5	30.4	8.9	100.0	
6. 임신부 건강교실 운영		-	15	20	16	6	57	3.23
		-	26.3	35.1	28.1	10.5	100.0	

- 임신관련정책 중 효과적인 정책으로는 산부인과 무료진료와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을 높이 평가함
 -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순서는 산부인과 무료진료(64.9%)이며, 다음으로는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50.9%)으로 조사 됨
 - 따라서 임신시기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는 산부인과 무료진료와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을 중점 지원해야 함
- 임신부 구강관리와 임신부 영양제 보급 정책은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함



1. 임신부 영양제 보급	4.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2. 임신부 구강관리	5. 정·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3. 산부인과 무료진료	6. 임신부 건강교실 운영

<그림4-4> 임신관련 정책 평가



<그림4-5> 임신관련 정책의 효과성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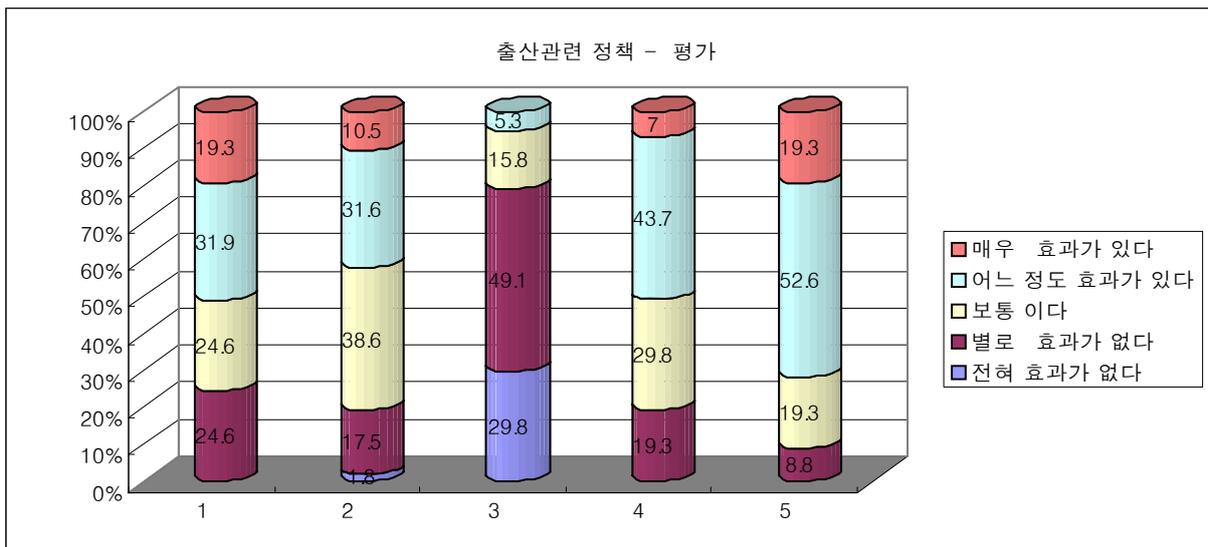
2. 출산관련 정책 평가

- 출산관련 정책 중 가장 효과성이 높은 정책으로는 출산요양비와 출산지원금으로 나타남
- 가장 효과성이 낮은 정책으로는 탄생축하 안내문 발송으로 조사됨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특수계층 관련 정책으로 전계층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표4-5> 출산관련 정책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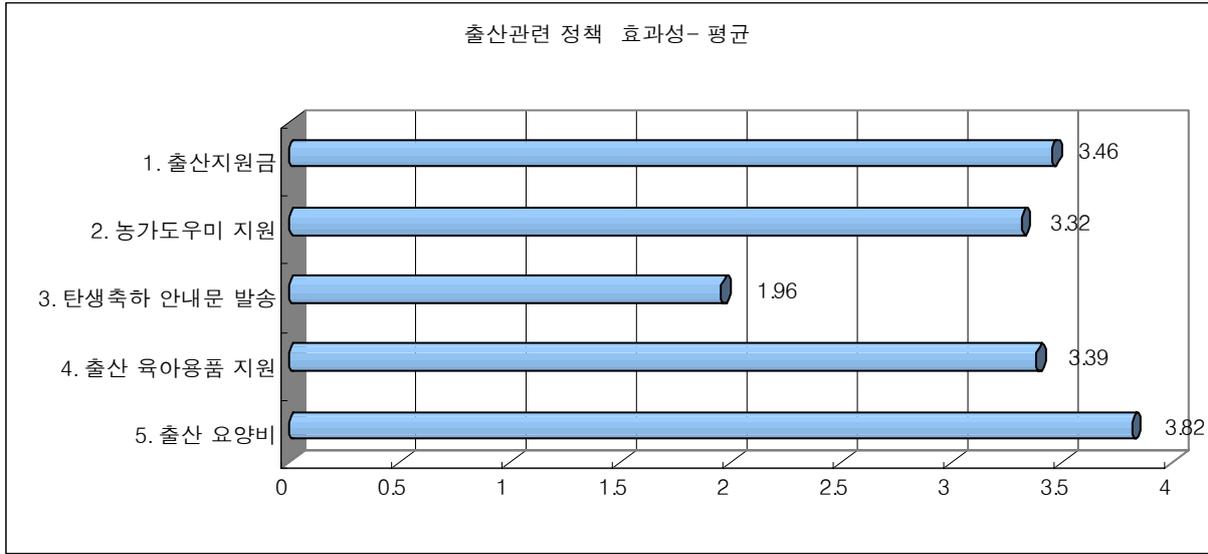
(단위:명, %)

임신관련 시책	효과성 평가	전혀 효과가 없다	별로 효과가 없다	보통 이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매우 효과가 있다	합계	평균
1. 출산지원금		-	14	14	18	11	57	3.46
		-	24.6	24.6	31.9	19.3	100.0	
2. 농가도우미 지원		1	10	22	18	6	57	3.32
		1.8	17.5	38.6	31.6	10.5	100.0	
3. 탄생축하 안내문 발송		17	28	9	3	-	57	1.96
		29.8	49.1	15.8	5.3	-	100.0	
4. 출산 육아용품 지원		-	11	17	25	4	57	3.39
		-	19.3	29.8	43.7	7.0	100.0	
5. 출산 요양비		-	5	11	30	11	57	3.82
		-	8.8	19.3	52.6	19.3	100.0	



1. 출산지원금 2. 농가도우미 지원 3. 탄생축하 안내문 발송	4. 출산 육아용품 지원 5. 출산 요양비
---	----------------------------

<그림4-6> 출산관련 정책 평가



<그림4-7> 출산관련 정책의 효과성 평균

- 출산관련 정책의 효과성 평균점수를 보면 출산요양비(3.82)와 출산지원금(3.46)의 평균이 높고, 출산 육아용품 지원(3.39)과 농가도우미 지원(3.32)은 다음으로 효과성이 높다고 평가되었으며, 탄생축하 안내문의 발송(1.96)에 대한 효과성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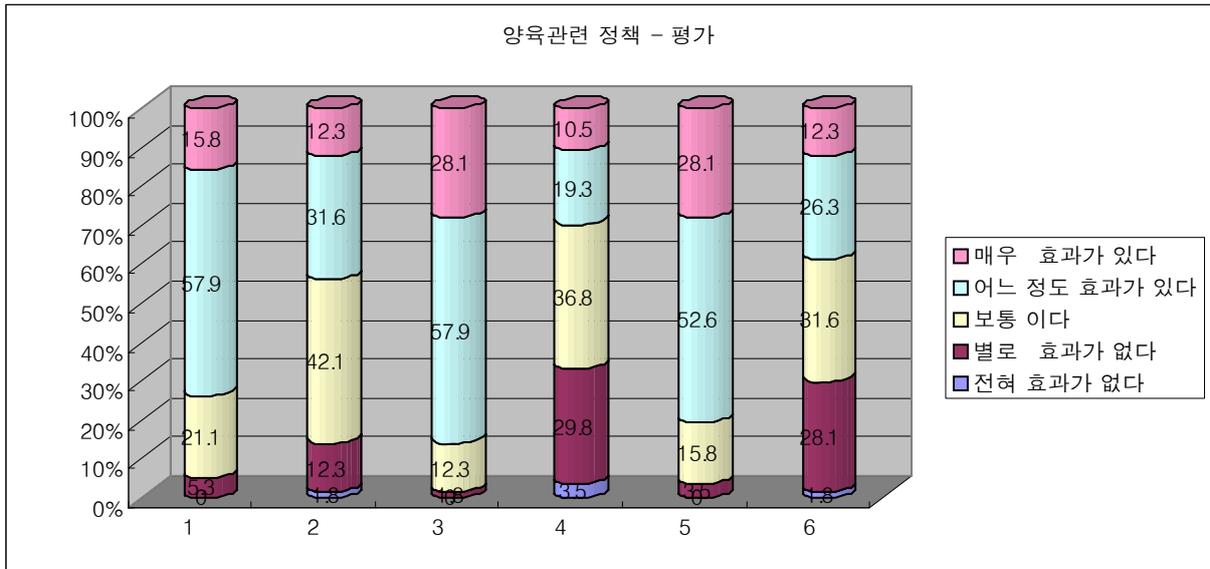
3. 양육관련 정책 평가

- 양육관련 정책 중 가장 효과성이 높은 정책은 양육 지원금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효과성이 높은 정책은 저소득층 양육비 지원 정책임
- 양육관련 정책은 모든 정책에 있어 평균 3점 이상의 결과를 보이며 4점 이상의 정책도 2개가 해당하여 다른 정책에 비해 가장 효과성이 높은 정책으로 평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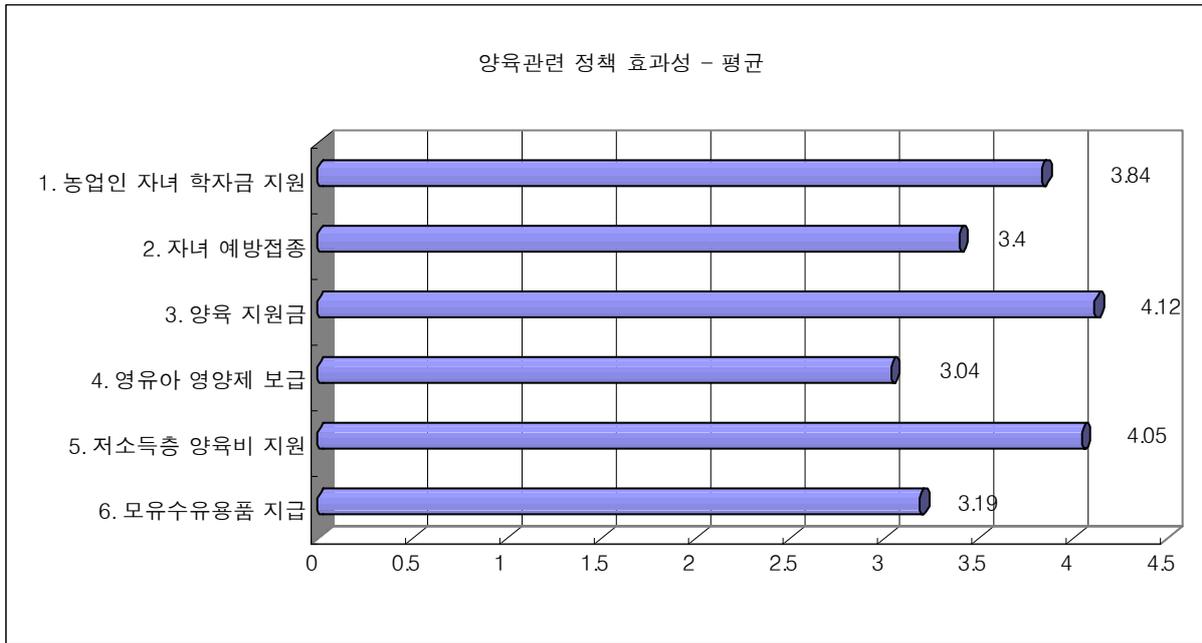
<표4-6> 양육관련 정책 평가

(단위:명, %)

양육관련 정책	효과성 평가						합계	평균
	전혀 효과가 없다	별로 효과가 없다	보통 이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매우 효과가 있다			
1.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	3	12	33	9	57	3.84	
	-	5.3	21.1	57.9	15.8	100.0		
2. 자녀 예방접종	1	7	24	18	7	57	3.40	
	1.8	12.3	42.1	31.6	12.3	100.0		
3. 양육 지원금	-	1	7	33	16	57	4.12	
	-	1.8	12.3	57.9	28.1	100.0		
4. 영유아 영양제 보급	2	17	21	11	6	57	3.04	
	3.5	29.8	36.8	19.3	10.5	100.0		
5. 저소득층 양육비 지원	-	2	9	30	16	57	4.05	
	-	3.5	15.8	52.6	28.1	100.0		
6. 모유수유용품 지급	1	16	18	15	7	57	3.19	
	1.8	28.1	31.6	26.3	12.3	100.0		



<그림4-8> 양육관련 정책 평가



<그림4-9> 양육관련 정책 효과성 -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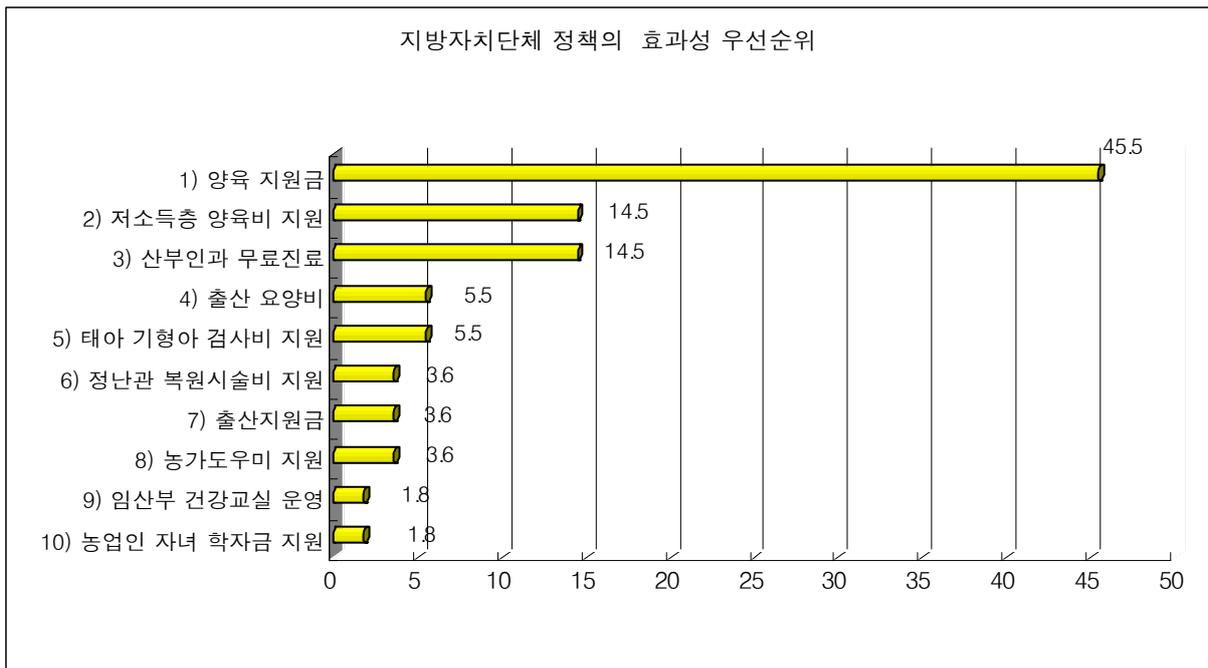
4. 지방자치단체 출산정책의 효과성 우선순위

-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아울러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 정책 중 가장 효과성 있는 정책으로는 양육지원금이라는 응답이 45.5%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양육 지원금이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나머지 9개 정책의 효과성 평가를 합한 비율과 유사할 정도로 양육 지원금의 효과성을 전문가 집단에서는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자치단체에서는 임신, 출산과정에서의 정책에 대한 지원보다 양육과 관련된 지원을 늘려야 저출산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표4-7>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효과성 - 우선순위

(단위:명, %)

	1순위	
1) 양육 지원금	25	45.5
2) 저소득층 양육비 지원	8	14.5
3) 산부인과 무료진료	8	14.5
4) 출산 요양비	3	5.5
5)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3	5.5
6) 정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2	3.6
7) 출산지원금	2	3.6
8) 농가도우미 지원	2	3.6
9) 임신부 건강교실 운영	1	1.8
10)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1	1.8
합계	55	100.0



<그림4-10>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효과성 - 우선순위

제 4 절 전문가 정책 제안

- 본 절은 전문가들에게 여러 가지 출산장려정책 추진방안에 대해서 의견들을 물어 보고 응답내용을 정리한 것임
- 자치단체에서 시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과, 출산장려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의견, 그리고 양성 평등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의견, 여성계와 여성단체의 역할,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의 지원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음

1. 자치단체에서 시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

- 자치단체에서 시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는데, 이를 정부에서 분류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에 맞추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분야, 가족 친화적·양성 평등적 사회문화 조성분야 그리고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분야, 나머지 기타분야로 분류하여 정리하여 보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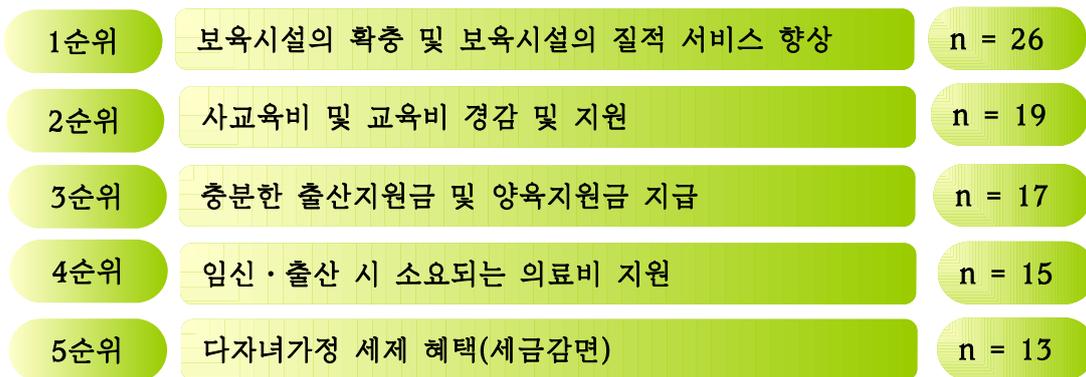
1)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분야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분야 지원내용은 아래의 <표4-8>의 내용과 같은데, 자녀양육 가정의 사회적·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정책과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확대로 나누어 세부 실천계획을 세우고 있음

<표4-8> 정부의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분야 추진정책

구 분	내 용
자녀 양육 가정의 사회 · 경제적 부담 경감	1) 영유아 보육 · 교육비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
	2) 방과 후 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3)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4) 결혼 시 및 다자녀가정의 주거안정 지원
	5) 입양아동 양육 지원 추진
	6) 아동수당제도 도입 검토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	7) 어린이집 ·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 확충 및 다양화
	8) 민간 육아지원시설 서비스 개선
임신 ·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9)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10) 불임부부 지원 및 저소득층 산모도우미 파견

- 이러한 기본적 내용과 함께 본 조사에서 전문가들이 제안한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분야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그림4-11>과 같음
- 가장 많이 제안된 내용으로는 보육시설의 확충 및 보육시설의 질적 서비스 향상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다음으로는 사교육비 및 교육비 경감 지원, 충분한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 지급, 임신·출산 시 소요되는 의료비 지원, 다자녀가정 세제 혜택의 순서로 가장 많이 제안 되었음



* n은 응답된 횟수를 말함

<그림4-11>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분야 주요 제안 내용

- 기타의 제안사항으로는 아동수당 및 보육수당 지급(n=9), 첫째 자녀부터 보육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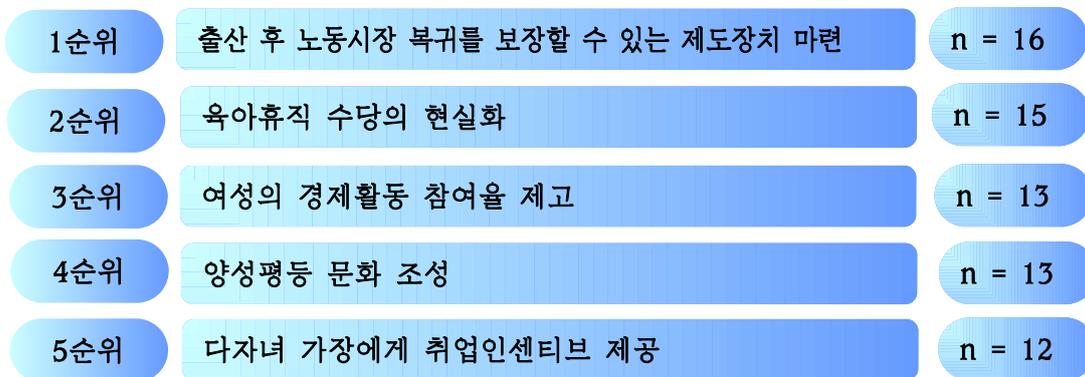
및 양육비 지원 (중산층까지 지원 확대) (n=6), 대학입학 시 특례적용 및 장학제도 마련(n=6), 방과후 교실 확대(n=5), 다출산 가정에 대한 우대정책 마련(n=4), 육아 도우미 교육 및 지원 확대(n=4), 아동 예방접종 무상 확대(n=4), 불임부부 치료비 지원 확대(n=4), 출산 및 교육을 사회가 책임져주는 시스템 구축(n=3), 자녀의 정기적 건강관리 지원(n=3), 산모 우대제도 마련(n=3) 등이 제안 되었음

2) 가족친화적 · 양성평등적 사회문화 조성 분야

- 정부의 가족친화적 · 양성평등적 사회문화 조성분야에 대한 추진정책으로는 아래의 <표4-9>와 같은데,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과 학교 · 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에 대한 정책으로 나누어 세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음

<표4-9> 정부의 가족친화적양성평등적 사회문화 조성 분야 추진정책

구 분	내 용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1) 산전후휴가 급여 등 지원확대
	2) 육아휴직 지원 강화
	3) 출산 · 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4)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개선
학교 · 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5) 양성평등 · 가족친화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강화
	6) 친밀하고 평등한 가족생활문화 조성



* n은 응답된 횟수를 말함

<그림4-12> 가족친화적양성평등적 사회문화 조성 분야 전문가 제안 내용

- 이외에도 육아휴직 활성화(n=10), 직장 내 탁아시설 설치(n=10),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n=8),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에게도 출산휴가와 출산휴가비 지급(출산 후 고용 지원) (n=8), 가족친화적 기업 발굴(n=8)등의 정책이 제안 되었음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분야

- 정부는 건전한 미래세대의 육성분야에는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에 대한 조성과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과 관련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표4-10>

<표4-10> 정부의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분야 추진정책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1)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2) 아동·청소년의 건전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1순위

어린이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

N = 3

* n은 응답된 횟수를 말함

<그림4-1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분야 전문가 제안 내용

4) 기타 정책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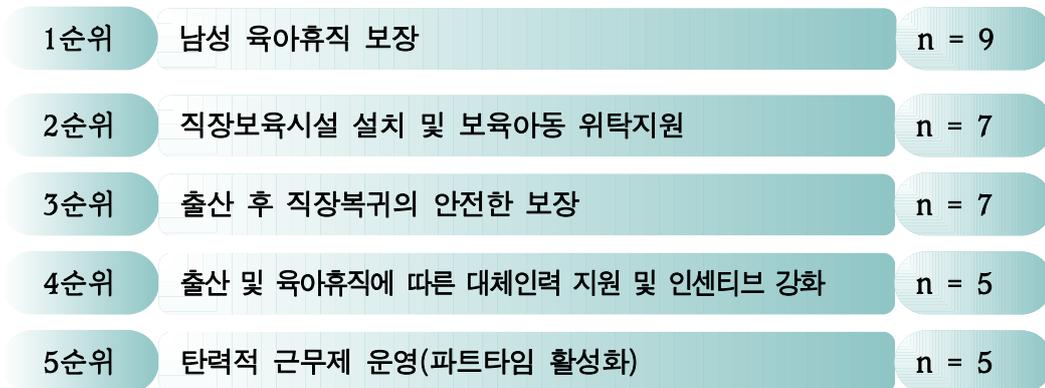
- 그 외에 기타 제안된 내용들은 아래의 <그림4-14>와 같음
- 이 중 정책에 대한 홍보방안의 수립과, 다양한 형태의 의식교육 실시, 청년실업 대책 마련 및 안정된 일자리의 제공 등은 장기적인 정책 방안으로 수립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정책제안 임

- | | |
|------------------------------------|-------------------------|
| 1. 주택자금 우선 지원 -주거안정 정책 | 7. 청년실업 대책 마련 |
| 2. 정책 홍보방안 수립
(홍보물 제작 배포 방법 수립) | 8. 사회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협의체구성 |
| 3.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계획의 수립 | 9. 미혼모 보호 |
| 4. “다양한 형태의 의식 교육” 실시 | 10. 안정된 일자리 제공 |
| 5. 인공임신중절 예방 | 11. 인구유출 방지 |
| 6. 국내입양 활성화 및 지원 | 12. 영유아 교육보험 가입해주기 |
| | 13. 1인 1특기적성교육 제공 |

<그림4-14> 기타 정책 제안 내용

2. 출산장려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의견

- 출산장려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어떤 정책들을 펼쳐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해 보면 아래의 <그림4-15>과 같음
-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차지하고 있는 것은 남성의 육아휴직 보장,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보육아동 위탁지원, 출산 후 직장복귀의 안전한 보장,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및 인센티브 강화, 탄력적 근무제 운영 등의 제안이 고순위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4-15> 출산장려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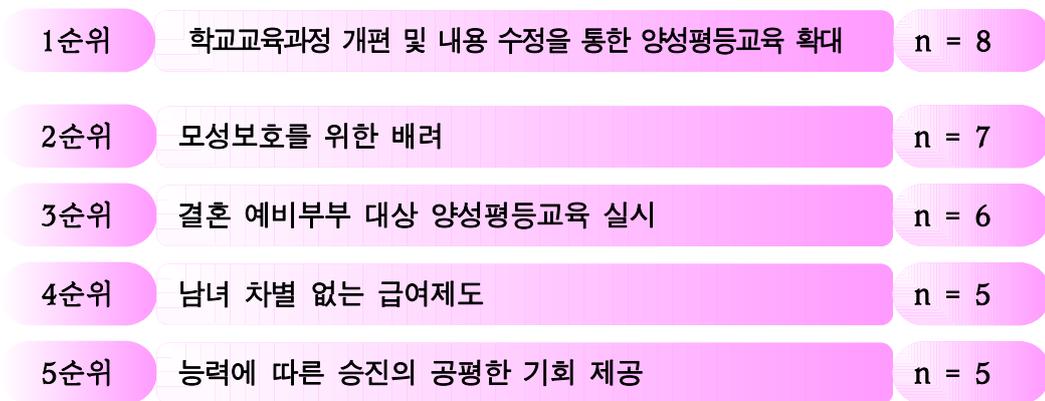
- 기타 순위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제안된 의견들은 아버지 출산휴가제의 법제화, 산전·후 휴가제도의 개선, 기업의 CEO 및 인사담당자의 교육 실시, 양육자의 어려움을 배려하는 직장 분위기의 형성, 직장 내 승급제도에서의 성차별 완화, 출산 후 계속 고용 시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각종기업연수 프로그램에 출산 및 인구교육강좌 의무개설, 자녀 교육수당 및 학비보조금 지원 등이 있음
- 특히 이중 가장 특기할만하고 자치단체에서 채택할 만한 의견으로는 아래의 <표 4-11>의 내용으로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가진 우수기업의 사례를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증을 통해서 이들 기업에 대한 세제를 감면해주고, 공단 등의 토지를 우선 제공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방안임

<표4-11> 전문가 제안 중 자치단체에서 채택 가능한 의견

-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가진 우수기업 사례를 발굴하고 발표하도록 함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증제
- 가족친화기업 세제감면 혜택 부여
- 가족친화기업 지방공단 우선제공 등의 각종 인센티브 제공

3. 양성 평등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의견

- 양성 평등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을 정리해 보면 1순위는 학교교육 과정의 개편 및 내용의 수정을 통한 양성평등교육 확대, 2순위는 모성보호를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며, 3순위는 결혼 예비부부 대상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4순위는 남녀 차별이 없는 급여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5순위로 능력에 따른 승진의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조사되었음



<그림4-16> 양성 평등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의견

- 기타의 의견으로 드라마를 통한 저출산의 심각성과 아이에 대한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과 고위공직자나 여교수, 전문직, 의원 등이 할당제를 확대 실시해야 함. 그리고 취업, 고용 노동과정 등에서 성차별을 없애야 하며, 부부가 함께 양육을 책임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확산시켜야 함
- 또한 고위 공직자의 리더쉽과 능력개발 프로그램 연수 시 출산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실시, 남녀차별적인 법규정 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임신부 및 유아동반 부모에 대한 배려,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가사노동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시키는 것을 제안하였음

- 이 중 자치단체에서 채택하여 시행 가능한 정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달의 양성평등 부부 및 모범기업, 단체, 학교를 선발하여 시상하고 매스컴에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음

4. 여성계와 여성단체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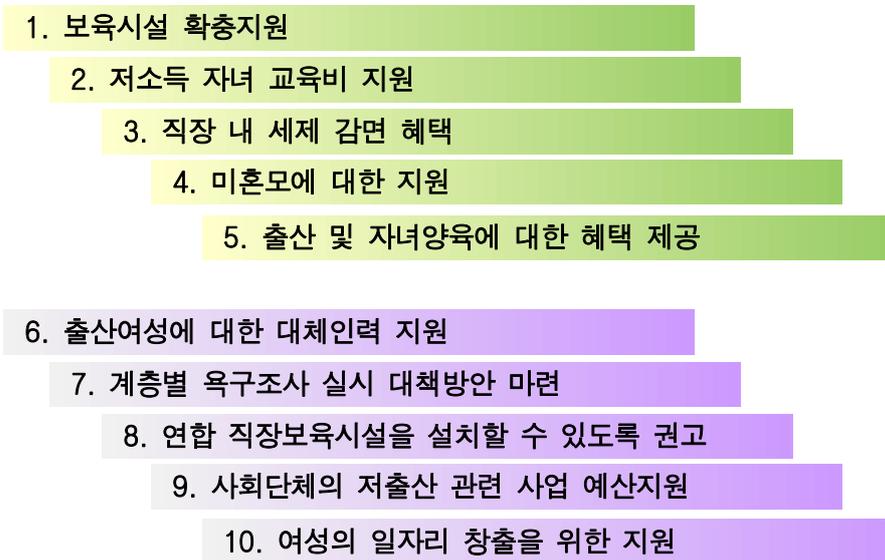
- 여성계와 여성단체의 역할과 관련한 의견은 그리 많지 않았으나 주요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4-12>와 같이 다양한 역할들을 강조하였음
- 주요역할로는 사회진출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더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과 올바른 자녀관을 갖도록 각종 행사나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하고, 평등한 직장문화를 마련하도록 홍보활동을 해야 하며, 연초에 단체의 사업계획 수립 시 저출산 관련 사업을 필수적으로 기획하도록 해야 하는 등의 의견이 주요 의견으로 조사되었음
- 가장 강조된 의견으로는 출산 후 재취업을 위한 역량훈련 및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여성단체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임
- 이러한 의견들은 여성단체만 단독으로 수행 하면 안 되며, 타 단체나 사회구성원들과 함께 시행해야 정책적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함

<표4-12> 여성계와 여성단체의 역할에 대한 의견

1. 자녀교육방안 제공(사회진출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대한 교육)
2. 올바른 자녀관을 갖도록 각종 행사나 제도 마련
3. 미혼모에 대한 지원
4. 평등한 직장문화 마련을 위한 홍보
5. 연초 사업계획 수립 시 저출산 관련 사업 필수적으로 기획
6. 청소년 성상담 및 성교육, 예비부부 및 예비부모교육, 행복하고 안전한 출산교육, 중년여성 및 노인여성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7. 저출산 대책 집중 홍보
8. 건강한 가정 가꾸기 운동 확산
9. 각 사회단체와 연대방안 모색
10. 인식변화를 위한 각종 사업방안 마련
11. 출산장려 캠페인, 간담회 및 세미나실시
12. 각 단체의 성격을 살려 펼칠 수 있는 사업방안 마련

5. 전라북도의 지원방안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지원해야 할 방안으로는 우선적인 방안으로 여성친화적인 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과 다자녀가구에 할인혜택 등을 제공하여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보육시설의 확충지원, 저소득 자녀 교육비 지원, 직장 내 세제 감면 혜택 부여, 미혼모에 대한 관심과 지원, 출산 및 자녀양육에 대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여성 친화기업
우대정책 마련

다자녀 가구
할인혜택 제공

<그림4-17> 전라북도의 지원방안

- 또한 출산여성에 대한 대체인력을 지원해야 하고, 계층별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연합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도록 하며, 사회단체의 저출산 관련 사업 수립 시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함
- 그리고 장기적으로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제 5 장

출산정책 개발을 위한 일반인 조사

- 제 1 절 조사응답자의 특성
- 제 2 절 결혼 및 이혼에 관한 가치관
- 제 3 절 출산에 대한 가치와 태도
- 제 4 절 저출산 원인의 영향력 평가
- 제 5 절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정책 평가

제 5 장 출산정책 개발을 위한 일반인 조사

- 본 연구에서는 출산정책 개발을 위해서 전문가 조사와 함께 일반인들의 출산관련 의식과 정책적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20~44세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본 장에서는 일반인 조사결과를 제시하고자 함

제 1 절 조사응답자의 특성

1. 조사응답자의 특성

- 일반인 조사 응답자의 특성은 <표5-1>과 같음
- 성별 구성비율은 남성 36.2%, 출산의 당사자인 여성이 63.8%임⁴⁾
- 연령별 구성은 결혼 준비기 연령인 20~24세가 19.1%를 차지하고, 실제 결혼 및 출산연령인 25~35세 54.1%, 결혼생활을 유지하며 후기 출산연령인 36~44세의 비율은 26.8%로 조사되었음
- 조사대상자의 학력구성비는 대졸이 53.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고졸이 42.5%로 대졸과 고졸의 비율이 96%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함. 그 외에 대학원졸업자는 3.5%를 차지하고, 중졸은 0.5%를 차지함
- 조사응답자의 직업구성을 보면 주부 22.7%, 사무종사자 21.2%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보이고 나머지 직업으로는 서비스종사자(13.2%)와 학생(11.5%), 나머지 직업군은 5%미만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응답자들의 평균수입으로는 200-300만원에 해당하는 비율이 36.3%로 가장 높고 100-200만원의 비율은 34%로 70.3%에 달하는 응답자가 100-300만원 사이의 평균 수입을 보이고 있음
- 조사 지역으로는 도시지역인 전주 49.4%, 도시근교지역인 완주군 거주 응답자가 24.8%, 도시와 농촌이 혼합되어 있는 지역인 김제지역 거주자 25.8%로 조사되었음

4) 표본추출 시에는 출산을 하는 당사자의 의견을 더 많이 살펴보기 위해서 남성 : 여성의 비율을 40 : 60으로 설계하였으나 조사원의 조사과정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였음

<표5-1> 조사응답자의 특성

(단위:명, %)

구분	내용	빈도	비율
성	남성	146	36.2
	여성	257	63.8
연령	20~24세	77	19.1
	25~35세	218	54.1
	36~44세	108	26.8
혼인상태	미혼	138	34.4
	유배우	255	63.6
	이혼 및 사별	8	2
학력	중졸	2	0.5
	고졸	169	42.5
	대졸	213	53.5
	대학원졸	14	3.5
직업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	0.2
	전문가	36	9
	기술공 및 준전문가	14	3.5
	사무종사자	85	21.2
	서비스종사자	53	13.2
	판매종사자	20	5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종사자	6	1.5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6	1.5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	0.2
	단순노무종사자	5	1.2
	군인	10	2.5
	주부	91	22.7
	학생	46	11.5
	무직	4	1
기타	23	5.7	
평균수입	100만원 이하	32	8.1
	100-200만원	135	34
	200-300만원	144	36.3
	300-400만원	46	11.6
	400-500만원	28	7.1
	500만원 이상	12	3
지역	전주	199	49.4
	완주	100	24.8
	김제	104	25.8

제 2 절 결혼 및 이혼에 관한 가치관

1. 결혼에 관한 가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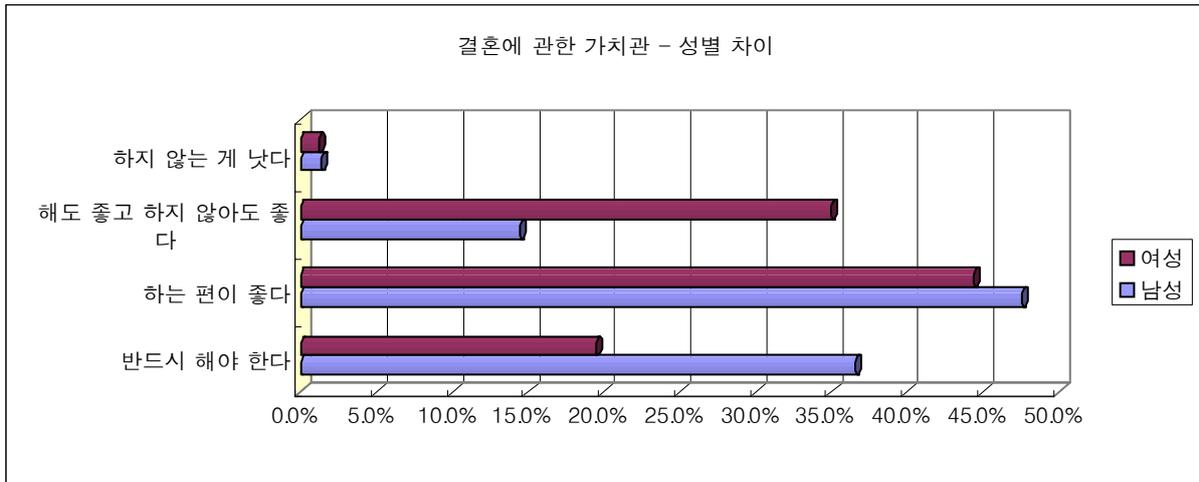
- 결혼에 관한 가치관으로는 반드시 해야 한다(25.6%), 하는 편이 좋다(45.5%)로 긍정적인 의견이 71.1%로 매우 높게 나타남. 그러나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27.6%), 하지 않는 게 낫다(1.2%)는 의견도 28.8%로 3분의 1정도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결혼에 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결혼에 관한 의견은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남
- 남성의 경우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 36.6%이고, 여성은 19.5%로 여성이 결혼에 대한 필요성을 더 못 느껴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함
- 결혼에 관한 의견은 특히 결혼 상태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는데, 미혼 남성의 경우 85.3%가 결혼에 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고, 미혼여성은 61.1% 결혼에 관해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전국의 미혼여성의 49.2%⁵⁾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비하면 전북의 미혼여성이 결혼에 대해서는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5-2> 결혼에 관한 가치관

(단위:명, %)

내용	빈도	비율	
반드시 해야 한다	103	25.6	71.1
하는 편이 좋다	183	45.5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11	27.6	28.8
하지 않는 게 낫다	5	1.2	
합계	402	100	

5)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보건사회연구원, 2005)의 결과임



<그림5-1> 결혼에 관한 가치관- 성별 차이

- 아래의 <표5-3>은 통계청에서 4년 주기로 시행하는 『사회통계조사』의 가족부문에 나타난 전라북도 응답자의 결혼에 관한 가치관 조사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이 결과를 보았을 때에도 남성보다 여성이 더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연도별로 변화를 봤을 때 남성과 여성 모두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있어서는 남성 6.9%, 여성 8.9%가 하락하여 결혼에 대한 필요성이 약화되어 감을 볼 수 있음

<표5-3> 사회통계조사 결과-결혼에 관한 가치관

(단위:%)

		15세이상 인구	반드시 해야한다	하는 것이 좋다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잘모르겠다
2006	계	100.0	25.7	42.0	27.5	1.8	0.4	2.6
	남성	100.0	30.0	45.1	21.1	1.0	0.3	2.5
	여성	100.0	21.6	38.9	33.6	2.6	0.5	2.7
2002	계	100.0	25.6	43.5	27.2	1.7	0.2	1.8
	남성	100.0	29.5	47.8	19.9	0.9	0.2	1.7
	여성	100.0	21.9	39.4	34.1	2.6	0.3	1.8
1998	계	100.0	33.6	39.9	23.8	1.1	0.2	1.4
	남성	100.0	36.9	42.6	18.4	0.7	0.1	1.4
	여성	100.0	30.5	37.4	28.9	1.4	0.2	1.5

자 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998, 2002, 2006 각년도.

- 이처럼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결혼을 해야 하는 주된 이유를 묻는 다중응답 결과, 가장 우선적으로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정서적 안정을 얻기 위해서 라고 32.6%가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인격적 성숙을 얻기 위해

서(15.3%), 세 번째로는 자녀를 갖고 싶어서와 경제적 안정을 얻을 수 있으므로 (13.2%)라고 응답하였음

- 결혼에 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응답자와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자 중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행동 또는 생활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 같아서 라는 응답(48.8%)과,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19.0%), 사회활동에 장애가 될 것 같아서 (16.7%)의 응답을 보였음
- 결혼을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에서 특히 여성의 경우 대부분이 행동 또는 생활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 같아서라는 응답의 비중이 94.4%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사회활동에 장애가 될 것 같다는 이유 때문이었고, 남성의 경우 행동 또는 생활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 같아서 라는 응답의 비중은 77.8%, 다음으로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라는 이유 때문으로 나타나 성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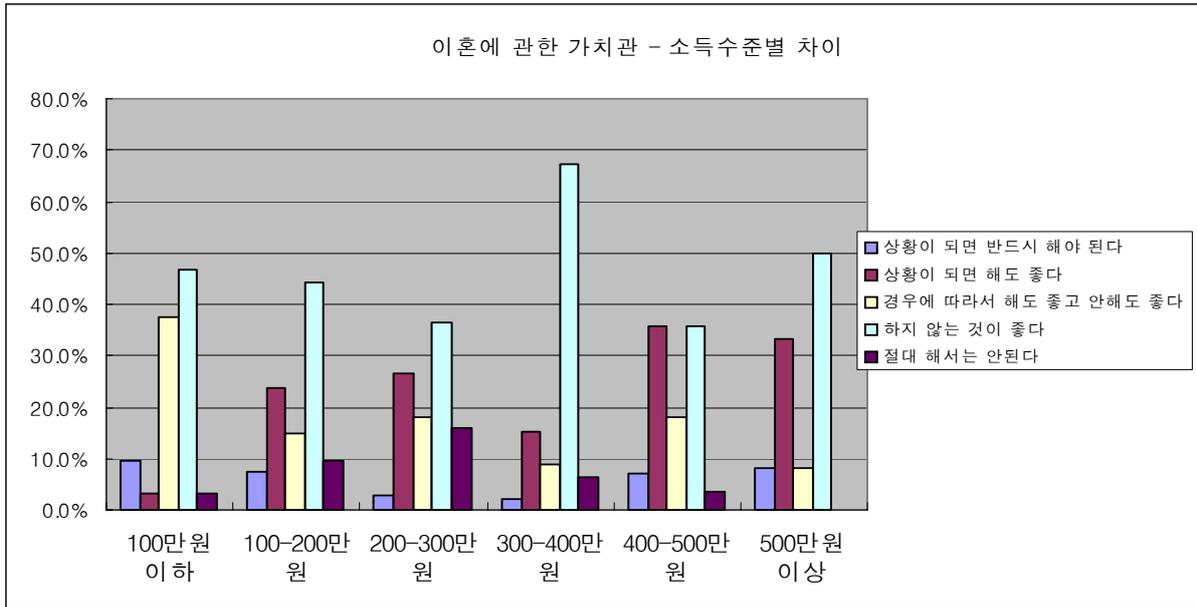
2. 이혼에 관한 가치관

- 이혼에 관한 의견으로는 하지 않는 게 낫다는 의견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황이 되면 하는 편이 좋다는 의견도 23.4%나 되었음
- 전체적으로는 이혼에 관해서는 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의견을 보임
- 이혼에 관한 의견도 결혼과 마찬가지로 성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상황이 된다면 이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음($p=0.034<0.05$)
- 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이혼에 대해 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고, 소득이 낮은 층에서 이혼에 관해 더 부정적이었음($p=0.002<0.05$)

<표5-4> 이혼에 관한 가치관

(단위:명, %)

내 용	빈도	비율	
상황이 되면 반드시 해야 한다	22	5.5	28.9
상황이 되면 하는 편이 좋다	94	23.4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68	16.9	16.9
하지 않는 게 낫다	177	44	54.2
절대 해서는 안 된다	41	10.2	
합계	402	100.0	



<그림5-2> 이혼에 관한 가치관 - 소득수준별 차이

- 상황이 되면 이혼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응답자들이 이혼을 하는 것이 좋은 주된 이유로 정서적 안정을 얻기 위해서 라는 응답이 4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주기 때문에 21.5%, 인격적 성숙을 얻을 수 있으므로 라는 항목에 15.3%의 응답을 보여 이혼의 사유는 주로 정서적 안정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음

3. 결혼 연령에 관한 가치관

- 일반적으로 결혼을 해야 하는 연령에 대한 의견으로 남성은 30세(46.6%)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여성은 28세(28.1%)라는 응답이 가장 높아 이상적인 결혼연령으로는 남녀가 2년의 연령차가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남성의 경우 30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연령은 28세(15.7%), 32세(13.5%)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28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연령은 30세(19.2%), 27세(18.2%), 26세(14.7%)의 순으로 나타났음
- 남성의 경우와 여성의 경우 이상적인 결혼연령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남성은 30세라고 응답한 비율이 50%가까이 되는 반면, 여성은 28세라고 응답한 비율이 28%로 여러 연령에 분산되어 있다는 점임. 남성은 28세에서 32세를 적정 결혼연령으로 보고, 여성은 26세에서 30세를 적정연령으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여성의 경우 23세와 24세라고 응답한 응답자도 있고, 남성의 경우는 35세와 38세라고 응답한 응답자도 있어 남성과 여성의 적절한 결혼연령에 대한 의견이 차이가 많음을 볼 수 있음
- 결혼연령과 관련해서는 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성의 결혼연령에 대해서는 남성 응답자들보다 여성 응답자들이 높은 연령에 결혼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여성의 결혼연령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더 높은 연령층을 선택하고 있는 반면에 남성들은 낮은 연령에 여성들이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p = .00 < 0.05$)
- 또한 연령별로는 여성의 결혼연령에 관련해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남성의 결혼연령과 관련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p = 0.031 < 0.05$), 36~44세의 높은 연령층의 경우 30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54.2%에 이르고 15.9%는 28세에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고, 20~24세의 젊은층의 경우는 30세에 결혼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기는 하나 28세부터 32세까지 다양하게 의견이 분포되어 있음. 또한 실제 결혼연령층인 25~35세의 경우는 30세가 가장 많은 비율(46.3%)을 보이고 있으나 30세 이상의 연령에 응답한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아 실제 결혼연령이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표5-5> 이상적인 결혼 연령에 대한 의견

(단위:명, %)

결혼연령	남성의 결혼연령		여성의 결혼연령	
	빈도	비율	빈도	비율
23세	-	-	10	2.5
24세	-	-	6	1.5
25세	3	0.7	49	12.2
26세	4	1	59	14.7
27세	11	2.7	73	18.2
28세	63	15.7	113	28.1
29세	24	6	9	2.2
30세	187	46.6	77	19.2
31세	12	3	1	0.2
32세	54	13.5	2	0.5
33세	24	6	2	0.5
34세	2	0.5	-	-
35세	16	4	1	0.2
38세	1	0.2	-	-
합계	401	100	402	100

제 3 절 출산에 대한 가치와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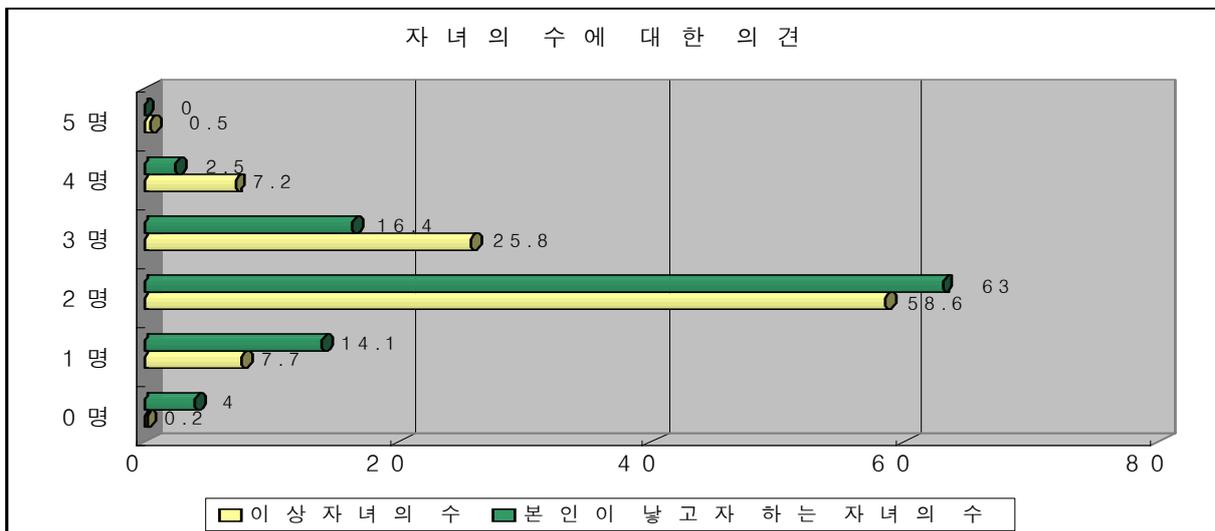
1. 일반적인 자녀의 수

- 일반적인 적정 자녀의 수는 몇 명이 적당한가? 라는 질문에 58.6%가 2명이라고 응답하였고, 25.8%는 3명이라고 응답하여 일반적인 자녀의 적정 수는 2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음
- 본인이 낳고자 하는 자녀의 수는 몇 명인가? 라는 물음에는 2명이라는 응답이 63%에 달하였고, 3명이라는 응답은 16.4%, 1명이라는 응답은 14.1%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이상적인 자녀의 수와 실제 본인이 낳고자 하는 자녀의 수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음
- 일반적인 적정 자녀의 수와 본인이 낳고자 하는 자녀의 수가 2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일치하나, 다음으로 적정한 자녀의 수에서 이상적인 자녀의 수는 3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5.8%였고, 본인이 낳고자 하는 자녀의 수에서는 16.4%로 줄었고, 1명이라는 응답자가 14.1%로 높아졌음. 또한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실제 낳고자 하는 자녀의 수에서는 4%로 이상적인 자녀의 수가 0명이라고 응답한 비율 0.2%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여 이상과 현실에서의 적정 자녀의 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상적인 자녀의 수와 관련해서는 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본인이 낳고자 하는 자녀의 수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보임. 여성의 경우 1명 내지 2명에서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남성의 경우는 3명의 자녀를 갖겠다고 비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 출산의 당사자인 여성의 의지가 저출산의 원인에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음

<표5-6> 자녀의 수에 대한 의견

(단위:명, %)

자녀의 수	이상적인 자녀의 수		본인이 낳고자 하는 자녀의 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0명	1	0.2	16	4
1명	31	7.7	57	14.1
2명	236	58.6	254	63
3명	104	25.8	66	16.4
4명	29	7.2	10	2.5
5명	2	0.5		
합계	403	100	403	100



<그림5-3> 자녀의 수에 대한 의견

2. 혼전 임신에 대한 의견

- 혼전 임신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경우에만 낳아야 한다는 의견이 62.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반드시 낳아야 한다는 의견이 22.2%로 나타나 혼전 임신을 했더라도 여건이 되면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의식은 낙태와 관련시켜 볼 수 있는 것으로 아이가 생겼을 경우에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에는 낙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자신과 아이에 대한 소중함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된 교육이 필요함

<표5-7> 혼전 임신에 대한 의견

(단위:명, %)

내 용	빈도	비율
반드시 낳아야 한다	89	22.2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경우에만 낳는다	249	62.1
절대로 낳아서는 안된다	25	6.2
모르겠다	28	7
기타	10	2.5
합계	401	100

3. 자녀 출산계획의 최종권한

- 자녀의 출산계획과 관련하여 최종 권한에 대해서는 누가 가지고 있는냐는 질문에 부부가 서로 상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의견이 50.6%로 가장 높았고, 본인 스스로 결정한다는 의견이 31.4%의 비율을 보였으며, 상대 배우자가 결정한다는 비율은 15.3%로 나타남
- 성별로 보았을 때 여성의 경우 본인 스스로 결정한다는 비율(36.1%)이 남성(20.9%)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은 부부가 서로 상의하여 결정한다는 비율(57.1%)이 여성(44.9%)보다 더 높아, 자녀의 출산계획과 관련해서 남성보다는 여성의 권한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5-8> 자녀 출산계획의 최종권한

(단위:명, %)

내 용	빈도	비율
본인 스스로 결정	80	31.4
상대 배우자	39	15.3
시부모 및 친정부모	6	2.4
형제, 자매	1	0.4
부부가 서로 상의하여	129	50.6
합계	255	100

4. 현재 자녀의 수

- 기혼자를 대상으로 현재 자녀의 수를 묻는 질문에 2명의 자녀가 있다는 응답자가 5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1명이라는 응답자가 23.9%, 3명이라는 응답자가 10.6%로 나타나 이상적인 자녀의 수 2명의 비율은 같으나 1명과 3명의 경우 비율이 반대로 나타나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음

<표5-9> 현재 자녀의 수

(단위:명, %)

	빈도	비율
0명	18	6.8
1명	63	23.9
2명	153	58
3명	28	10.6
4명	2	0.8
합계	26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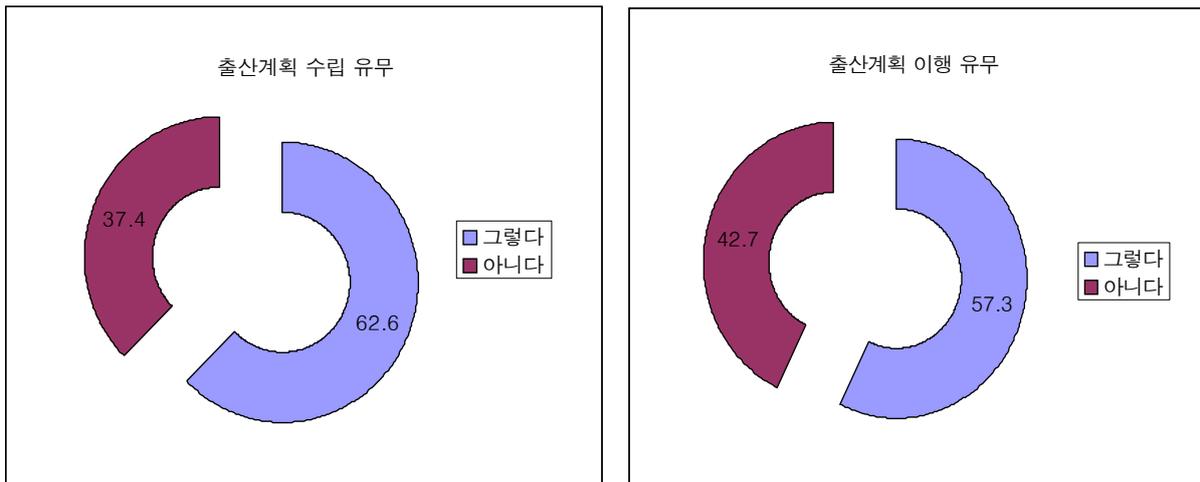
5. 출산계획의 수립 및 이행

- 결혼 전후로 출산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한 질문에 62.6%의 응답자는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37.4%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상당수가 출산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출산계획 시 낳고자 한 자녀의 숫자로는 2명이 72.1%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3명이라는 응답이 16.3%로 그 뒤를 이었음
- 출산계획을 세운 응답자 중 출산계획이 제대로 이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57.5%가 이행이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42.5%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표5-10> 출산계획의 수립 및 이행

(단위:명, %)

	출산계획 수립 유무		출산계획 이행 유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그렇다	164	62.6	94	57.3
아니다	98	37.4	70	42.7
합계	262	100	164	100



<그림5-4> 출산계획의 수립 및 이행

<표5-11> 출산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이유

(단위:명, %)

	빈도	비율
자녀양육비용 부담	28	40.0
고용 및 소득 불안정	11	15.7
아이를 돌볼 마땅한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7	10.0
출산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차별	1	1.4
보다 많은 여가를 즐기고 자아성취를 위해서	4	5.7
건강상의 문제	10	14.2
기타	9	12.8
합계	70	100

- 이러한 출산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위의 <표5-11>에서 보는바와 같이 자녀양육비용 부담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40.0%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고용 및 소득 불안정(15.7%), 건강상의 문제(14.2%)의 순으로 나타나 출산

과 관련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적 요인 중 자녀양육비용으로 양육 비용에 대한 지원 및 대책이 요구됨을 알 수 있음

6. 자녀양육-남편도움 정도

- 자녀를 양육하는데 남편이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지 묻는 질문에 약간 도움을 준다는 응답이 40.1%로 가장 높았음. 그러나 별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응답도 이보다 약간 낮은 수준인 35.8%의 응답율을 보여 남편의 자녀양육에 도움 정도는 가정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반면 매우 많은 도움을 준다는 비율(14.8%)이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9.3%)는 비율 보다 높아 남편이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참여하지 않는 비율보다 높은 수준임을 볼 수 있음

<표5-12> 자녀양육-남편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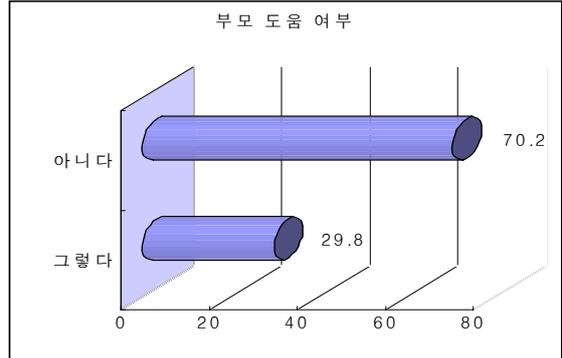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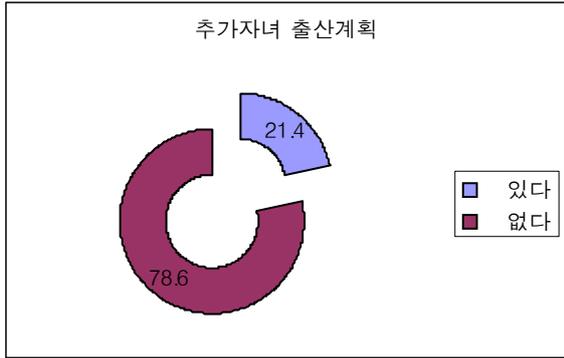
	빈도	비율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	24	9.3
별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	92	35.8
약간 도움을 준다	103	40.1
매우 많은 도움을 준다	38	14.8
합계	257	100

7. 추가자녀 출산계획 및 부모도움 여부

- 현재의 자녀 이외에 추가 자녀의 출산 계획이 있는 응답자는 55명으로 21.4%가 추가 자녀를 가질 계획이라고 응답하였고, 78.6%는 추가자녀를 가지지 않을 계획으로 나타남
- 추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80.6%가 1명을 더 낳겠다고 응답하였으며, 10%는 2명을 더 출산하겠다고 응답함

<표5-13> 추가자녀 출산계획 및 부모도움 여부

(단위:명, %)			(단위:명, %)		
추가자녀 출산계획	빈도	비율	부모도움 유무	빈도	비율
있다	55	21.4	그렇다	16	29.8
없다	202	78.6	아니다	39	70.2
합계	257	100	합계	55	100



<그림5-5> 추가자녀 출산계획 및 부모도움 여부

- 추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가 보육시설에 들어갈 때까지 부모의 도움을 받을 계획인가에 대한 응답으로는 그렇다는 응답이 29.8%,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0.2%로 부모에게 자녀의 양육과 관련하여 의지 하지 않으려는 응답자가 더 많음
- 자녀의 양육과 관련하여 부모에 대한 의지는 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p=0.001<0.05$), 남성의 경우는 100%가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43.6%가 부모에게 의지하겠다고 응답하여, 주 양육자인 여성의 경우 부모에게 의지할 의향이 높음을 볼 수 있음

<표5-14> 현재 자녀의 수에 따른 추가자녀 출산계획

		현재의 자녀 수					전체
		0명	1명	2명	3명	4명	
		빈도	13	28	12	1	
있다	비율	81.3	46.7	7.9	3.7	0	21.1
	빈도	3	32	139	26	2	202
없다	비율	18.8	53.3	92.1	96.3	100.0	78.9
	빈도	16	60	151	27	2	256
전체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p=0.000 < 0.05$)

- 추가 자녀의 출산계획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자녀수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데, 자녀가 없거나 1명인 경우에는 추가 자녀 출산계획이 있는 비율이 있지만, 현재 자녀수가 2명이나 3명인 경우에는 추가자녀의 출산계획이 없는 비율이 매우 높아 자녀의 수가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음
- 아래의 <표5-15>는 추가자녀의 출산 시 양육은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본인 또는 남편이라는 응답이 50%로 가장 높았고, 친정부모 또는 시부모라는 응답이 23.2%로 두 번째 높은 비율을 보임. 세 번째는 놀이방 등 보육시설에 맡긴다는 응답으로 나타나 아직도 본인이나 가족에 의한 보육을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음

<표5-15> 추가자녀 출산 시 양육 주체

(단위:명, %)

	빈도	비율
본인 또는 남편	28	50
친정부모 또는 시부모	13	23.2
기타 가족 또는 친인척	2	3.6
파출부, 가정부, 베이비시터 등	4	7.1
놀이방 등 보육시설	8	14.3
기타	1	1.8
합계	56	100

8. 육아휴직 이용

- 직장이 있는 기혼여성에게 육아휴직을 이용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있다는 응답자는 60%, 이용계획이 없다는 응답자는 40%로 이용계획이 있는 응답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육아휴직을 이용하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로는 한 가지 이유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분포를 보임. 수입이 줄어들까봐, 직장 내에서 승진과 보직 등에서 불이익을 염려해서, 대체인력이 확보되지 않아서 직장동료에게 피해를 줄까봐, 그리고 복직이 어려울까봐 라는 응답이 비슷한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9. 남성의 육아휴직에 관한 의견

- 남성의 육아휴직과 관련하여서는 대체로 찬성(52.7%)하거나 매우 찬성(22.9%)하는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여성의 경우 찬성하는 비율이 높고, 남성의 경우 찬성하는 비율이 여성에 비해 낮게 나타남. 이는 아직도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에 대해 긍정적이지 못함을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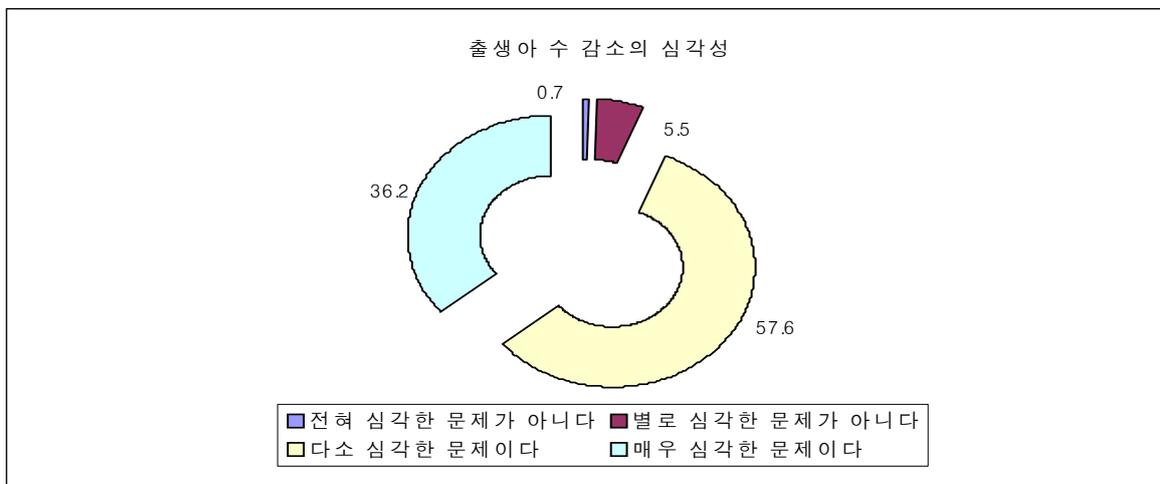
<표5-16> 남성의 육아휴직에 관한 의견

(단위:명, %)

	빈도	비율
전혀 찬성하지 않음	8	2
별로 찬성하지 않음	90	22.4
대체로 찬성	212	52.7
매우 찬성	92	22.9
합계	402	100

10. 출생아수 감소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57.6%가 다소 심각한 문제이다 라고 응답하였고, 36.2%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라고 응답하여 출생아수 감소가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5-6> 출생아 수 감소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 4 절 저출산 원인의 영향력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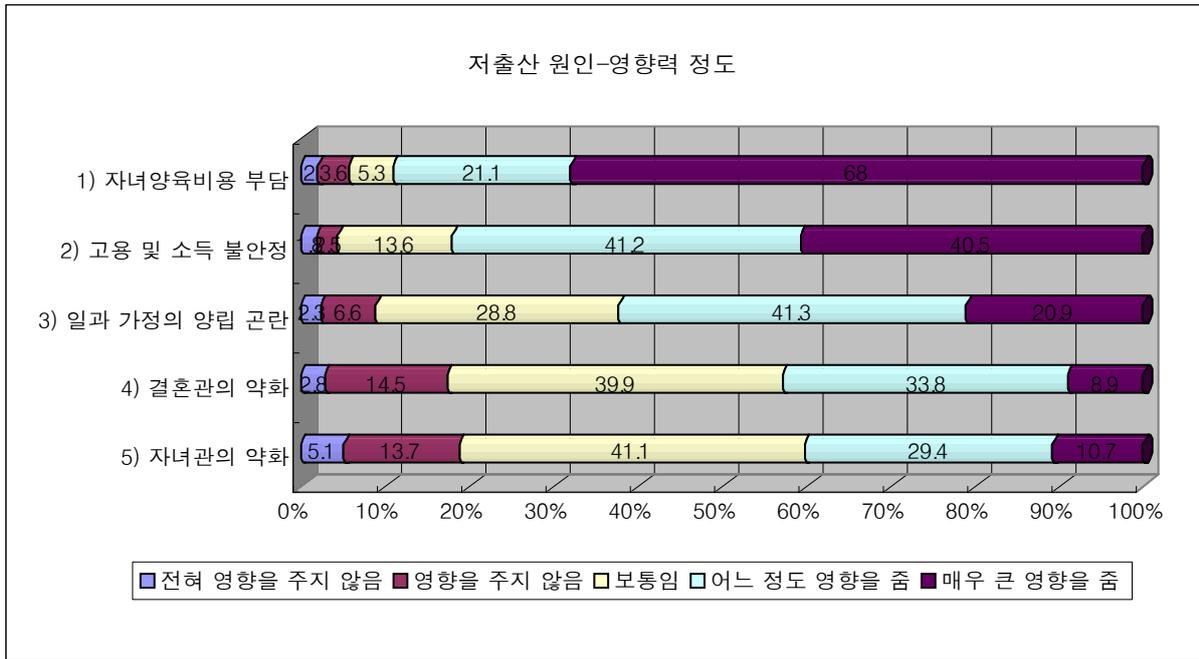
1. 저출산 원인의 영향력 평가

- 저출산 원인 중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은 경제적 요인 중 영유아 보육비, 초·중고 사교육비 등 자녀양육비용 부담이라고 응답하였음(매우 큰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비율 68.0%)
 - 다음으로는 결혼·출산연령층의 고용 및 소득 불안정(40.5%)
 -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 곤란(20.9%)
 - 자녀관의 약화 및 결혼관의 약화는 영향력이 가장 미약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전문가 조사결과와도 일치되는 것으로서 일반인의 경우 전문가보다 경제적 요인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느끼는 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5-17> 저출산 원인의 영향력 평가

(단위:명, %)

	저출산의 원인 요인		합계	영향력		보통임	어느 정도 영향을 줌	매우 큰 영향을 줌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음	영향을 주지 않음			
경제적 요인	1) 영유아 보육비, 초·중고 사교육비 등 자녀양육비용 부담	빈도 (비율)	394 (100.0)	8 (2.0)	14 (3.6)	21 (5.3)	83 (21.1)	268 (68.0)
	2) 결혼·출산연령층의 고용 및 소득 불안정	빈도 (비율)	393 (100.0)	7 (1.8)	10 (2.5)	55 (13.6)	162 (41.2)	159 (40.5)
사회적 요인	3)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빈도 (비율)	392 (100.0)	9 (2.3)	26 (6.6)	113 (28.8)	162 (41.3)	82 (20.9)
가치관 변화	4) 결혼관의 약화	빈도 (비율)	393 (100.0)	11 (2.8)	57 (14.5)	157 (39.9)	133 (33.8)	35 (8.9)
	5) 자녀관의 약화	빈도 (비율)	394 (100.0)	20 (5.1)	54 (13.7)	162 (41.1)	116 (29.4)	42 (10.7)



<그림5-7> 저출산 원인의 영향력 평가

2. 저출산 원인의 영향력 순위

<표5-18> 저출산 원인의 영향력 순위

(단위:명, %)

저출산의 원인 요인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경제적 요인	1) 영유아 보육비, 초중고 사교육비 등 자녀양육비용 부담	빈도 (비율)	249 62.6	76 19.1	35 8.8	13 3.3	20 5.0
	2) 결혼 · 출산연령층의 고용 및 소득 불안정	빈도 (비율)	67 16.8	198 49.9	76 19.1	39 9.8	19 4.8
사회적 요인	3)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빈도 (비율)	34 8.5	62 15.6	184 46.3	57 14.4	63 15.9
가치관 변화	4) 결혼관의 약화	빈도 (비율)	22 5.5	40 10.1	68 17.1	194 48.9	75 18.9
	5) 자녀관의 약화	빈도 (비율)	26 6.5	21 5.3	34 8.6	94 23.7	220 55.4

- 저출산 원인 요인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가장 큰 영향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1순위는 영유아 보육비, 초중고 사교육비 등 자녀양육비용 부담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2.6%에 해당하였음

- 그 다음으로 2순위에서 영향력을 준다고 응답한 것은 결혼 및 출산연령층의 고용 및 소득불안정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9.9%로 나타남
- 다음의 순서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결혼관의 약화, 자녀관의 약화 순으로 조사됨

제 5 절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정책 평가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정책의 실효성 평가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관련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45.2%의 응답자가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응답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그러나 25.8%는 실효성은 있으나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고 있어 다소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도 함
- 또한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11.9% 있어 출산관련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예산의 재정비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표5-19>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관련 정책의 실효성

(단위:명, %)

	빈도	비율
실효성이 있다	19	4.7
실효성이 거의 없다	182	45.2
실효성은 있으나 예산이 적다	104	25.8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48	11.9
잘 모르겠다	50	12.4
합계	40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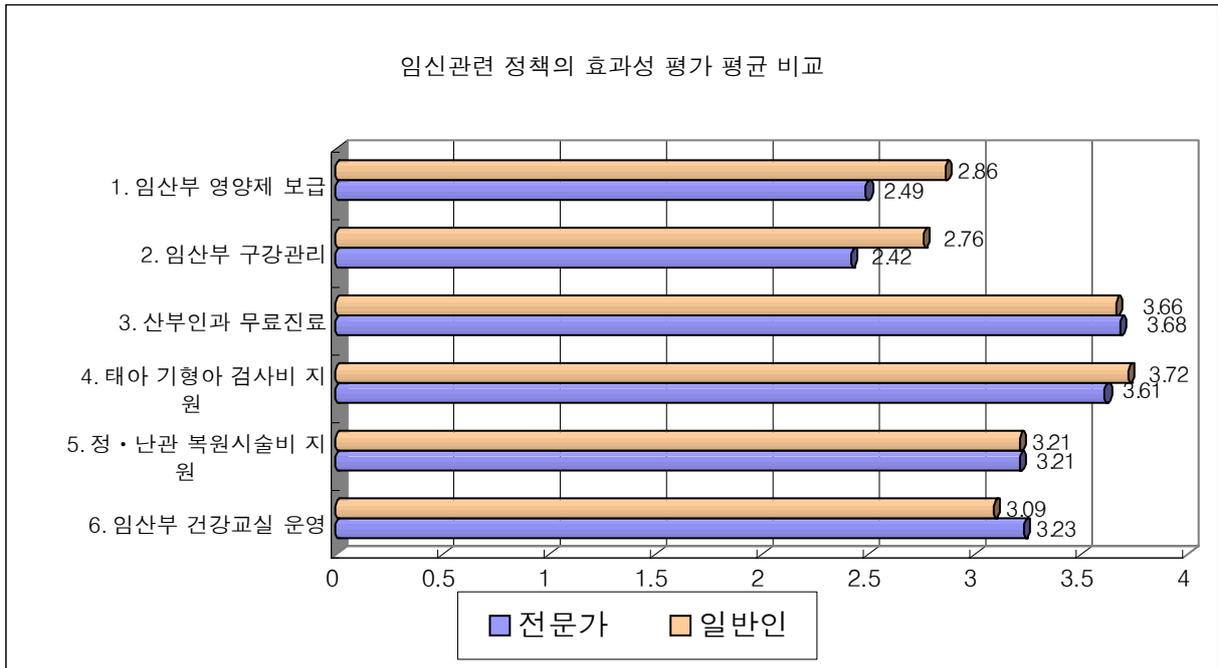
2. 임신관련 정책 평가

- 임신관련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으로 조사됨 (이는 전문가 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임)
- 그 다음으로는 산부인과 무료진료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으며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과 효과성 평가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따라서 임신관련 정책 중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는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과 산부인과 무료진료를 중점 지원해야 함
- 임산부 영양제 보급과 임산부 구강관리 정책은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표5-20> 임신관련 정책 평가

(단위:명, %)

임신관련 정책	효과성 평가						합계	평균
	전혀 효과가 없다	별로 효과가 없다	보통 이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매우 효과가 있다			
1. 임산부 영양제 보급	42	112	137	77	32	400	2.86	
	10.5	28.0	34.3	19.3	8.0	100		
2. 임산부 구강관리	50	120	131	75	24	400	2.76	
	12.5	30.0	32.8	18.8	6.0	100		
3. 산부인과 무료진료	23	40	89	146	101	399	3.66	
	5.8	10.0	22.3	36.6	25.3	100		
4.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22	32	86	156	104	400	3.72	
	5.5	8.0	21.5	39.0	26.0	100		
5. 정·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26	75	146	91	60	398	3.21	
	6.5	18.8	36.7	22.9	15.1	100		
6.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34	90	126	105	44	399	3.09	
	8.5	22.6	31.6	26.3	11.0	100		



<그림5-8> 임신관련 정책의 효과성 평균- 비교

- 전문가 조사 결과와 비교한 <그림5-8>을 보면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일반인의 경우 임신관련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전문가에 비해 효과성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전문가가 일반인의 경우보다 효과성이 높게 평가한 임신관련 정책으로는 임신부 건강교실 운영과 산부인과 무료진료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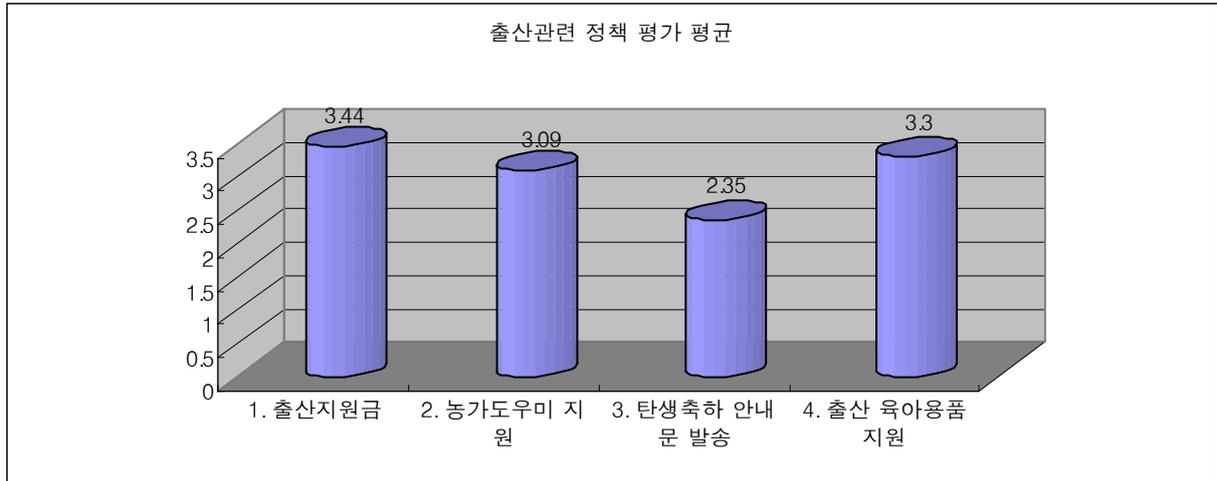
3. 출산관련 정책 평가

- 출산관련 정책 중 가장 효과성이 높은 정책으로는 출산지원금과 출산육아용품 지급으로 나타남
 - 가장 효과성이 낮은 정책으로는 탄생축하 안내문 발송으로 조사됨
 - 출산지원금이 효과성이 높다고 평가한 것은 전문가 조사와도 같은 결과를 보임

<표5-21> 출산관련 정책 평가

(단위:명, %)

출산관련 시책	효과성 평가						합계	평균
	전혀 효과가 없다	별로 효과가 없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매우 효과가 있다			
1. 출산지원금	22	67	112	111	89	401	3.44	
	5.5	16.7	27.9	27.7	22.2	100.0		
2. 농가도우미 지원	24	91	147	101	38	401	3.09	
	6.0	22.7	36.7	25.2	9.5	100.0		
3. 탄생축하 안내문 발송	90	149	108	39	15	401	2.35	
	22.4	37.2	26.9	9.7	3.7	100.0		
4. 출산 육아용품 지원	31	66	130	100	74	401	3.30	
	7.7	16.5	32.4	24.9	18.5	100.0		



<그림5-9> 출산관련 정책의 효과성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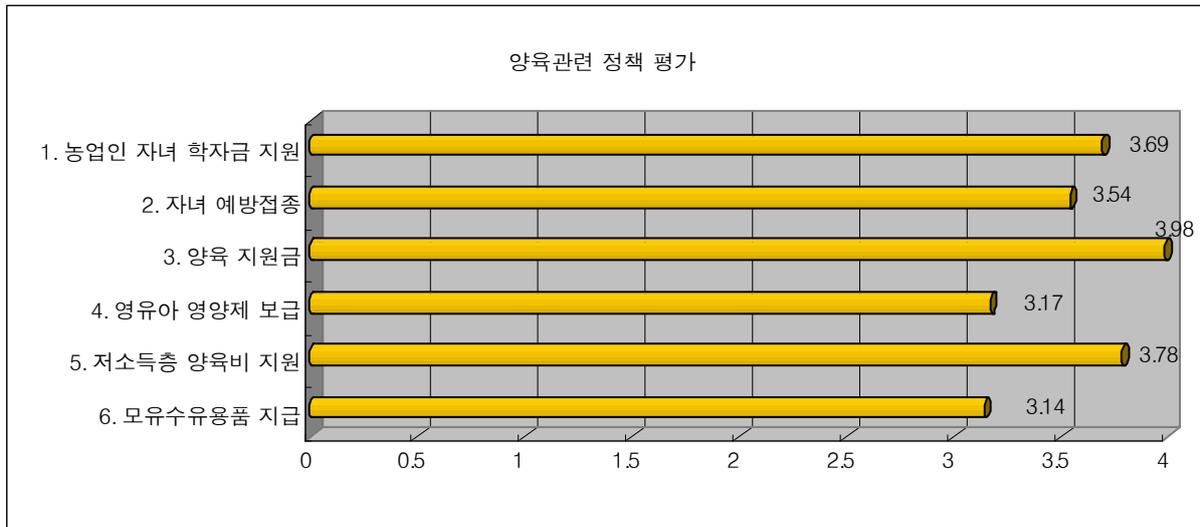
4. 양육관련 정책 평가

- 양육관련정책 중 가장 효과성이 높은 정책은 양육 지원금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효과성이 높은 정책은 저소득층 양육비 지원정책임
 - 양육관련정책은 평균 3 이하의 평가가 나온 것이 하나도 없어 대체적으로 임신, 출산, 양육관련정책 중 가장 효과성이 높은 정책군으로 조사되었음

<표5-22> 양육관련 정책 평가

(단위:명, %)

양육관련 정책	효과성 평가						합계	평균
	전혀 효과가 없다	별로 효과가 없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매우 효과가 있다			
1.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11	31	112	164	82	400	3.69	
	2.8	7.8	28.0	41.0	20.5	100.0		
2. 자녀 예방접종	11	48	135	127	80	401	3.54	
	2.7	12.0	33.7	31.7	20.0	100.0		
3. 양육 지원금	11	28	71	137	153	400	3.98	
	2.8	7.0	17.8	34.3	38.3	100.0		
4. 영유아 영양제 보급	18	91	151	86	55	401	3.17	
	4.5	22.7	37.7	21.4	13.7	100.0		
5. 저소득층 양육비 지원	11	35	98	143	114	401	3.78	
	2.7	8.7	24.4	35.7	28.4	100.0		
6. 모유수유용품 지급	34	80	142	82	61	399	3.14	
	8.5	20.1	35.6	20.63	15.3	100.0		



<그림5-10> 양육관련 정책 평가-평균

5.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효과성 우선순위

-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아울러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 중 가장 효과성 있는 정책으로는 양육지원금이라는 응답이 33.4%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다음으로는 산부인과 무료진료정책의 효과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음(13.2%)
- 세 번째로는 저소득층 양육비 지원이 효과성 있다고 응답(10.1%)
- 나머지 정책의 경우는 1%~3%의 응답율을 보여 그다지 효과성이 높다고 판단하지 않음

<표5-23>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효과성 - 우선순위

	1순위	
	빈도	비율
1) 양육 지원금	129	33.4
2) 산부인과 무료진료	51	13.2
3) 저소득층 양육비 지원	15	10.1
4)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29	7.5
5) 임신부 영양제 보급	19	4.9

6. 출산이 가능한 바람직한 사회여건

- 안심하고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 여건으로 1순위 에서는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의견이 2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이라는 의견이 19.8%,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이라는 의견이 13.7%의 순서로 나타남
- 2순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20.6%), 사교육비 경감(15.5%), 그리고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의 순서로 3가지 항목이 1순위와 2순위에서 모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출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제적요인인 양육 비용과 관련한 것으로 교육비의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됨

<표5-24> 출산이 가능한 바람직한 사회여건

(단위:명, %)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 양성평등 구현	9	2.3	9	2.3
2) 학벌위주 사회문화 타파	33	8.4	18	4.6
3) 공교육 활성화	38	9.6	39	9.9
4) 사교육비 경감	90	22.8	61	15.5
5) 경기 활성화(고용안정)	36	9.1	34	8.6
6)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확립	8	2.0	11	2.8
7) 한부모 가족에 대한 편견 해소	1	0.3	4	1.0
8)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	78	19.8	81	20.6
9)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54	13.7	58	14.7
10) 복지수준의 향상	36	9.1	55	14.0
11) 지나치게 치열한 경쟁적 사회 지양	11	2.8	24	6.1
합계	394	100.0	394	100.0

제 6 장

전라북도 출산정책 추진방안

- 제 1 절 단기정책 추진방안
- 제 2 절 중장기정책 추진방안

제 6 장 전라북도 출산정책 추진방안

제 1 절 단기정책 추진방안

- 지금까지 살펴본 전문가 및 일반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전라북도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단기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함. 크게 1 저출산 대비 추진체계의 구축, 2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3 실질적인 교육 및 혜택 제공 차원에서 8가지 시책을 제안하고자 함

1. 저출산 대비 추진체계의 구축

1) 저출산 대책 전담조직 신설 및 지정권고

◁ 사업개요 ▷

- 현 황 : 총괄부서 : 전라북도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저출산 고령화 담당
※ '06. 8. 조직신설(전담인력 : 3명 ▷ 5급 1, 6급이하 2)
시·군 : 가정복지, 사회복지, 보건분야에서 담당하고 있음
- 개편방향

- 전라북도 : 인력보강 필요
- 시·군 : 전담부서 지정필요
- 현재는 가정복지, 사회복지, 보건분야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임

◁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

- 필 요 성 :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전라북도와 시·군이 연계하여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시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효 과 :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통한 시·군의 정책에 대한 책임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정책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

2) 「저출산·고령화 대응 T/F팀」 개편 및 운영

◁ 사업개요 ▷

- 구성현황 : 저출산 고령화 관련 담당업무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12개 팀원 35명으로 구성(팀장1, 팀원 12, 담당 22)

- 개편방향

- 시민사회 각 분야 참여 확대
(여성계, 의료계, 노동계, 학계, 보육계, 종교계 등)
 -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회의 개최
 - 정책발굴 및 정책평가
 - 사회적 합의 도출

- 회의개최 : 정 기 - 격월개최(년 6회)
수 시 - 필요사항 발생시 개최

◁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

- 필 요 성 : 출산을 장려하고 촉진할 수 있는 민·관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책을 발굴, 평가, 자문 역할 추진
- 효 과 : 지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공유와 공동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시책의 발굴 및 실천 가능

3) 「저출산 관련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

◁ 사업개요 ▷

○ 사업내용 :

- 저출산 관련 정책개발 및 계획 수립 과정에서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정책 수요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기 위해 사회 모든 부문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 도와 기업체(노동조합), 민간단체(여성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언론단체 등) 등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책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저출산 문제를 공론화하고 여론을 형성
- 저출산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자원 발굴 및 상호 연계 추진



<저출산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협의체(안)>

◁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

- 필요성 : 저출산에 대한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을 단위로 한 다양한 주체들간의 협조체제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
- 효과 : 정책파트너십 구축을 바탕으로 각 사회주체들의 책임과 역할, 정책추진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음

2.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1) 가족친화적 기업 우수사례 발굴 및 지원

◁ 사업개요 ▷

- 지원대상 :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질 높은 육아 인프라 확충 업체
임신, 출산에 대한 기업 환경 조성 업체
가족 친화, 양성평등적 직장분위기 조성 업체
- 우수기업 선정 : 가족친화적 직장 인증서 수여, 장려금 지급

◁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

- 필요성 : 출산장려에 대한 직접지원보다 다양하고 면밀한 간접 지원책의 선행이 필수적임
- 효과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직장문화 조성과 기업의 사회적 분위기 확대

2) 전북지역 출산장려 커뮤니티(포탈정보) 구축

◁ 사업개요 ▷

- 사업개요 : 전북지역 육아정보 및 교육정보 제공 홈페이지 구축
- 사업내용 : - 전북지역 보육시설 정보
- 성공적 육아방법, 다자녀가족 행복체험 등 유형별 블로그와 커뮤니티 구성
- 결혼준비 여성, 가임기 여성, 1자녀 가족, 다자녀 가족 등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장을 형성

◁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

- 필요성 : 육아 및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의 필요성

- 효 과 : 만7세 이하의 아이를 가진 엄마들의 온라인상에서의 모임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커뮤니티 형성 가능

3. 실질적 교육 및 혜택 제공

1) CEO를 위한 가족친화 경영강좌 보급

◁ 사업개요 ▷

- 사업량 : 2개 단체지원 및 3개 업체
- 지원대상 : - 가족친화 기업환경 조성 및 우수실천 업체
 - 임신, 출산장려 및 보육환경 조성업체
 - 가족친화교육 및 강사배출 여성단체
- 운영방식
 - 기업주에게 가족친화적 직장환경의 필요성과 실천 사례에 대한 강좌를 보급
 - 운영주체는 여성단체가 주도하고 강사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비를 도에서 지급
 - 우수 기업주 발굴을 통해 기업이 기업을 설득하고 홍보하는 도미노식 교육확산

◁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

- 필요성 : 직장·가정의 양립을 위한 기업지원 체계와 환경은 미흡하므로 기업주에게 가족친화적 운영철학의 필요성을 제고 시키고 실제로 이를 적용한 사업주를 발굴, 포상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가족친화적 기업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함
- 투자효과 : 출산장려와 육아인프라 조성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 분위기 확산유도

2)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발급 사업(부산시 성공사례)

◁ 사업개요 ▷

- 사업개요 : 다자녀가정에 대해 『우대카드』를 발급
 - 물품의 구매 혹은 시설 이용 시 할인혜택 제공
- 사업대상 : 2000년 이후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

- 추진방법 : - 참여기관 및 업체모집(협약체결 등)
 - 『우대카드』 발급 및 배포
 - 참여기관(금융기관, 의료기관, 서비스업, 제조업, 문화공연, 문화전시, 각종강좌 등)

◁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

- 필요성 : 다자녀가정에게 각종 혜택이 주어짐으로써 자녀를 출산, 양육하는데 부담을 덜어줌
- 효과 :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 및 인센티브 제공
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자녀가정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책이 될 수 있음

3) 국제결혼 가정 지원

◁ 사업개요 ▷

- 사업개요 : 국제결혼 가정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 사업대상 : 전라북도 거주 국제결혼 가정
- 추진방법 : -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문화적응 프로그램 제공
 - 국제결혼 가정의 부부 및 고부간 적응 프로그램 제공
 - 국제결혼 자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학습, 정서도우미)
 - 국제결혼 자녀의 보육 지원
 -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멘토링사업
 - 여성결혼이민자의 임신, 출산, 양육관련 서비스 체계 구축
(시·군 보건소에서 관리)

◁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

- 필요성 : 농촌지역의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의한 출산이 늘어나고 있어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다각적 지원이 필요함
- 효과 : 농촌지역의 출산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제 2 절 중장기정책 추진방안

- 본 절에서는 전라북도 출산정책의 중장기정책 추진방안으로서 인구유입 및 인구유출방지 정책과, 출산관련 홍보정책, 그리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방안에 대해 제안해 보고자 함

1. 인구유입 및 인구유출방지 정책

1)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유입 정책

◁ 사업개요 ▷

- 사업개요 : 전라북도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사업대상 : 전라북도에 공장을 건설하거나 이전하는 기업
- 추진방법 : -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한 기업이전 보조금 지급
- 이전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

- 필요성 : 기업유치는 고용 증대 및 인구의 유입을 초래해 지역 인구가 증가되며, 기업의 생산 활동을 통해 산업 생산을 증대시켜 고용과 생산 등의 복합 작용을 기초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됨
- 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한 인구증대(인구유입 및 출산의 증가)의 가장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 청년층 일자리 제공을 통한 인구유출방지 정책

◁ 사업개요 ▷

- 사업개요 : 고학력 청년층의 일자리 제공
- 사업대상 : 전북지역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기 졸업한 미취업 청년층
- 추진방법 : - 기업체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제공
- 기존 업체에 청년층 채용 시 채용 장려금 지급

◁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

- 필요성 : 고학력 청년층의 수도권으로의 유출은 전북이 당면하고 있는 인구문제, 저출산문제를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이들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전북에 머물게 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있음
- 효과 :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의 인구문제와 저출산 문제를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음

2. 출산관련 홍보정책

◁ 사업개요 ▷

- 사업개요 : 저출산 문제에 대한 도민의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방안 마련
- 사업대상 : 전라북도민
- 추진방법 : - 중·장기적 홍보방안 마련을 통한 단계적 홍보추진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수립
- 시민사회단체를 통한 저출산 문제 홍보방안 수립

◁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

- 필요성 : 저출산 문제는 단시일 내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의식변화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다양한 방법에 의한 저출산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홍보방안을 수립해야 함
- 효과 :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공유와 함께, 자치단체의 출산정책을 홍보하

여 도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음

3.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실시

◁ 사업개요 ▷

- 사업개요 :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교육 실시
- 사업대상 : 전라북도민
- 추진방법 : -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교 교과과정을 통한 가치관 형성
 - 사회단체를 통한 교육방안 수립
 - 가족 내 양성평등의식 확산 교육방안 수립

◁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

- 필요성 :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는 방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을 통한 것
이므로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가족의 중요성과 아이의 중요성을
알아가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효과 : 맞춤형 교육을 통한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 결혼 및 출산, 그리고 가족
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수 있음



<생애주기별 중점 교육·홍보 내용>

참 고 문 헌

- 관계부처 합동(2006)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 김승권(2002)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장·단기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용익(2005)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 『보건복지포럼』.
- 김종철(2003)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출산안정 정책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_____ (2005) 『저출산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김종해(2006) “저출산과 보육정책”,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대응 포럼』 발표자료, 참여자치연구소.
- 은기수(2005) “미혼에서 결혼으로 이행 - 최근 우리나라 저출산이 갖는 의미”, 『보건복지포럼』.
- 이삼식 외(2005)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_____ (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영석(2005) 『저출산시대의 정책패러다임의 전환과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이인숙(2004) 『경남의 출산 장려 방안』, 경남발전연구원.
- 인구보건복지협회(2006) “저출산·고령화 극복 인구교육”, 인구보건복지협회.
- 전라북도(2005) 『2006년도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 전라북도.
- _____ (2006) 『2007년도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 전라북도.
- 최숙희(2005) “외환위기 이후 저출산 원인 분석”, 삼성경제연구소.
- _____ (2006) “획기적인 출산율 제고방안”, 삼성경제연구소.
- 통계청, 각종 통계자료.

전발연 2006정책연구

전라북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대안

발행인 | 한 영 주

발행일 | 2006년 12월 31일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560-014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4가 1번지

전화:(063)286-9201 팩스:(063)286-9206

<http://www.jd.re.kr>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발전연구원에 속합니다.